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에서의 대의제 변화와 정당의 역할

2009. 9

연구기관: 송실대학교
연구책임자: 강원택(송실대학교 교수)

1. 본 연구보고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발전기금으로 수행한 디지털 컨버전스 기반 미래연구의 연구결과입니다.
2.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 컨버전스 기반 미래연구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제 출 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에서의 대의제 변화와 정당의 역할』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9. 9. 30

연 구 기 관 : 숭실대학교

연 구 책 임 자 : 강원택(숭실대학교 교수)

목 차

요약문	3
제1 장 서 론	13
제2 장 디지털 컨버전스와 대의제	16
제1 절 정보화와 대의제 민주주의	16
제2 절 디지털 컨버전스로 인한 정치적 소통의 변화와 대의제	19
제3 장 디지털 컨버전스와 정치과정의 변화	25
제1 절 네트워크화된 개인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	25
제2 절 유연하고 수평적인 정치적 네트워크의 구축과 정당 조직	31
제3 절 새로운 이슈의 부상과 ‘일상 속의 정치’의 등장	36
제4 절 공적 공간과 사적 이슈 간의 충돌과 대의제	43
제4 장 결 론	48
제1 절 연구의 요약과 함의	48
제2 절 정책 제언	53
참고문헌	56

요 약 문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래의 일로 간주되었던 디지털 컨버전스는 이제 현실의 일부가 되어 가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통신, 방송, 인터넷 등 각 매체 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하나로 융합되는 형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그와 관련된 정보 통신, 방송 등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행동 양식에도 상당한 변화를 만들어 낼 수밖에 없다. 정치적으로는 정치적 정보 유통의 매개체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되는 대신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활동을 통한 직접적인 행위가 강화된 것이다. 그런데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도래는 이와 같은 변화의 추세를 질적으로 보다 심화(deepening)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 망에 고정되어 있어야 했던 이전 상황과 비교할 때 디지털 컨버전스는 유비쿼터스의 환경 속에서 사용자의 활동의 공간적 범위와 시간적 유연성을 강화해 줄 수 있으며, 다양한 매체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개인의 정치적 ‘정보 역량’은 그만큼 강화될 수 있는 것이다. 즉 디지털 컨버전스는 개인의 정보 획득의 능력과 기동성을 강화함으로써 정치적 정보의 생산과 전파에 대한 시민 개인의 능력을 증대시켰다. 이러한 변화는 불가분 그동안 정치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행해 온 정당과 의회와 같은 대의제의 핵심적 기구의 기능과 역할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 이 연구는 디지털 컨버전스로 인한 개인의 정치적 정보 역량의 강화가 대의제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 연구 주요 내용

○ 제1장 서론

과거의 정치과정은 국가와 시민사회를 연계하는 매개체의 주도적 역할에 의해 이뤄졌다. 정당은 의사소통과 정치적 결집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채널의 기능을 해왔으며 이는 의회라는 대의의 장에서 토론되고 결정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보화의 진전, 특히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방송, 통신의 기능적 융합에 기초한 개인 미디어의 강화, 그리고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라는 사회적, 기술적 현상이 결합하면서 이제는 중간 매개체에 의존함 없이 시민이 개인적 수준에서 얼마든지 정치적 정보를 획득하고 공유하고 이해관계를 결집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 따라서 디지털 컨버전스라고 하는 기술적 진보와 그로 인한 생활양식의 변화는 시민의 정치 참여와 정치적 의사소통의 방식의 변화를 이끌고 있으며, 이는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을 담당해 온 전통적 기구들의 역할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디지털 컨버전스라는 기술적 진보는 인터넷 등장 이후 지속되어 온 정치적 변화의 추세를 더욱 강화시키는 한편, 전통적인 대의 기구와 시민 간의 관계에 대한 ‘질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 연구는 바로 이런 점에 주목하면서 디지털 컨버전스라는 기술적 진보가 근대 사회 등장 이후 전통적으로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 온 의회를 통한 대의제 민주주의와 특히 정치과정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맡아온 정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 제2장 디지털 컨버전스와 대의제

－ 제1절 정보화와 대의제 민주주의

정치적으로 본다면, 디지털 컨버전스는 기술, 서비스, 산업 등이 디지털을 매개로 수렴되거나 분화됨으로 인해 정치행위자의 제도적 개입, 조정과 시민, 소비자의 참여를 둘러싼 기존의 조직과 행동 양식이 통합되거나 재구조화 되는 현상이다. 이 글

에서의 전제는 디지털 컨버전스가 개인의 정보 역량 강화로 이어지게 된다면 그만큼 정치 과정상의 중간 매개 집단에 대한 의존성이 약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즉 대의제의 주요 기구인 정당과 의회는 그 역할이나 위상에 있어서 지금보다 그 중요성이 약화되는 처지에 놓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보화의 진전이 대의제 민주주의나 정당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기존 연구는 대체로 거시적인 시각에서 변화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디지털 컨버전스를 포함한 정보화가 이끌고 있는 정치적 결과를 제대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미시적인 차원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정치적 현상에 대해 주목하는 일이 보다 중요하다.

－ 제2절 디지털 컨버전스로 인한 정치적 소통의 변화와 대의제

정보화 사회 도래 이후의 정치과정은 ‘조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크게 네 가지 차원에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첫째, 정치 조직의 단위이다. 정보화의 도래 이후 정보 획득, 해석, 확산 및 소통, 그리고 정치적 결집이라는 측면에서 시민 개인의 역량은 크게 강화되었다. 그런 만큼 계급, 종교, 지역 등 집단적 정체성을 근간으로 한 조직체를 단위로 했던 정치 과정은 이제 ‘개인’이 주도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두 번째, 조직적 특성의 변화이다. 대중정당과 같은 과거 조직의 특성은 지지자들을 교화시키고 조직화하기 위한 위계적이고 중앙집권화된 형태를 취했다. 정보화 시대 이후 나타나고 있는 조직의 특성은 수평적이고 자율적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세 번째는, 정치과정에서 제기되는 이슈에 대한 것이다. 정보화 시대에 정치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슈는 물질적 가치나 경성 이슈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실생활과 관련된 복지, 보건, 환경, 교육 등 하위 정치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커졌다. 네 번째는 정보화의 진전으로 인한 공적 영역과 사적 이슈 간의 갈등의 가능성이다. 인터넷 등장 이후 개인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제를 설정해 낼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되면서, 사적인 행위와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시민과 그 행위의 공공성, 혹은 공적인 속성(혹은 그 가능성)의 의미를 중시하는 국가 간에 갈등이 생겨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갈등은 국가와 시민사회 혹은 국가와 시민 개인 간의 직접적 대립으로 일어나는 것이어서 이 사이에 갈등 해소의 주체로서 의회나 정당이 개입

할 여지는 매우 적다는 문제가 있다.

○ 제3장 디지털 컨버전스와 정치 과정의 변화

－ 제1절 네트워크화된 개인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

인터넷을 통한 시민의 참여는 네트워크화된 개인주의라는 특성과 관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네트워크화된 개인주의는 고립된 개인들의 결합이 아니라 일종의 사회적으로 형성된 관계망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개인들을 의미한다. 이는 무엇보다 정당으로 대표되는 대의제 정치과정에서 정당 정치의 존재 기반의 변화를 설명해 준다. 정당의 핵심 지지층의 특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집단적인 정체성의 약화이다. 계급, 지역, 종교, 언어, 인종 등 외생적 요인(exogenous factors)에 의해 집단적 정체성이 규정되고, 그러한 정체성에 기초한 정치적 연대가 정당에 대한 집단적 지지로 이어졌던 근대 대중정당의 시대와는 명백히 상이한 정치적 환경에 놓이게 된 것이다. 한편, 집단 정체성으로부터 비롯되는 한, 연대감과 충성심은 조직 구조의 경직성, 권위주의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네트워크화된 개인주의는 유연함, 느슨한 결합, 협력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특성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대중정당 시대의 조직 형태와는 뚜렷이 구분된다. 무엇보다 큰 차이는 인터넷 공간 상에서 형성되는 네트워크, 즉 관계망은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구조가 아니라 행위자들 간의 자발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되는 구조라는 점이다. 문제는 이것이 정당과 의회 등 전통적인 대의제 기구의 역할과 기능이 ‘위축되는’ 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디지털 컨버전스로 더욱 가속화되는 새로운 정치적 환경의 도래는 우리나라 정당이 두 가지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는 정당이 지역주의라는 집단적 정체성에서 벗어나 어떻게 개인화된 정치 참여의 변화 속에 적응해 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소위 ‘3김’의 정치적 퇴장 이후 지역주의에 기반한 정체성의 약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를 대신할 새로운 지지의 기반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두 번째는 보다 근본적인 것으로, 정치적 정보 역량이 강화된 개인이 정치과정에서 정보의 획득, 확산, 해석에 주도적인

기능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정책 생산이나 사회적 네트워크의 형성에 서 매우 취약한 우리나라의 정당의 역할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 제2절 유연하고 수평적인 정치적 네트워크의 구축과 정당 조직

정보화 이후 나타나는 정치 참여는 조직적으로는 자율성의 증대와 약한 구속력이 라는 특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획일화되거나 위계적으로 조직된 참여가 아니라 수 평적으로 네트워크화된 구조 속에서 협력과 공유를 통한 참여와 정치적 정보의 생 성, 확산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참여 동기와 조직적 특성은 한국 정치에 서 매우 보기 드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정치적 규합의 형태는 아래로부터 자발적으로 형성되고, 지나 충성심 역시 과거와 같은 후견주의 (patron-clientalism)적 관계에서 벗어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당은 과거 와 같은 수직적, 위계적 조직 형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새로운 네트워크 환경 속에서 스스로를 재조직해 내지 못하고 있고, 그로 인해 현실 정치에서도 중요한 이슈에서 소외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에 대한 정당의 부적응, 대의제 기구의 대응의 실패는 정치적 책임성의 취약, 포퓰리스트의 등장 가능성 등 안정적 민주주의의 유지와 발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정보화 시대의 정당 정치에서 는, 과거와 같이 강한 정치적 일체감의 유지, 위계적인 조직과 중앙집권적 당 운영 과 같은 대중정당적 특성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하고 느슨한 정체성을 토대로 한 개 방적, 수평적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 핵심적인 개혁 과제가 되고 있다.

－ 제3절 새로운 이슈의 부상과 ‘일상 속의 정치’의 등장

디지털 컨버전스라고 하는 기술적 진화와 함께, 과거라면 정보 유통의 매개적 위 치에 놓인 기구에 의해 걸러졌을 만한 사소하고 일상적인 이슈들조차 정보화의 진 전 그리고 디지털 컨버전스로 인해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현상이 나 타나고 있다. ‘일상 속의 정치’라는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현상이 디지털 컨버전스 와 함께 강화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슈의 다양화는 정당이

나 의회 차원에서 제대로 대응하기 힘든 또 다른 도전이 되고 있다. 집단적 정체성에 기초한 ‘핵심적 이슈’ 혹은 ‘경성 이슈’를 중심으로 정책적 관심사를 집중해 왔던 과거의 정치 과정. 대의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환경에 처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정당 정치가 경성 이슈나 ‘무겁고 심각한 이슈’에만 집중해 있는 사이에 시민들은 정당을 우회하여 인터넷 공간 상에 자신들만의 새로운 논의의 장을 만들어 가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이슈의 속성뿐만 아니라 이슈가 제기되는 방식의 변화 역시 정당이 나 의회의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집단이 아니라 개인을 중심으로 한 이해관계의 표출로 인해 너무나도 다양해진 사회적 요구를 정당이나 의회가 과연 적절하게 반영해 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즉 개인화된 정치 참여는 하나의 이슈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총체적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것을 어렵게 하고 협소한 이해관계를 뛰어 넘는 정치참여를 어렵게 하여 사회적, 정치적 통합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디지털 컨버전스로 인해 시민 개인의 정치적 정보 역량이 강화되는 추세는 과거에는 정치적으로 조직화되거나 표출되기 어려운 소수 집단의 이해관계나 관심사가 모두 사회적으로 주목 받는 어젠더로 등장할 수 있게 만들고 있다. 이런 변화는 과거 다수의 집단적으로 공유된 이해관계를 대표해 온 정당에게는 또 다른 도전이 될 수밖에 없다.

— 제4절 공적 공간과 사적 이슈 간의 충돌과 대의제

정보화로 인한 개인 정보 역량의 강화로 인해 사회 문제에 대한 개인 수준의 의견 제시나 논의가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때때로 그 사안이 공론화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사적인 영역에서의 활동이 그 의도와 무관하게 공적인 논의 과정에 개입하게 되면서 두 영역 간에 충돌이 생겨날 수 있다. 개인 입장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논의가 사회적인 의미를 지니는 데 대한 부담과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을 수 있는 반면, 사회적으로는 그러한 사적인 의견제시가 공적인 영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책임성을 물을 수 없다는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 보다 심각한 문제점은 이와 같은 사적 이슈와 공적 영역 간의 괴리가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개인의 의사개진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

는 이슈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 의견표명의 사적 의미를 강조할 것이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그로 인한 사회적 결과에 보다 의미를 부여하고자 할 수 있다. 더욱이 사적 공간에서의 논의 과정이 기존의 제도권을 벗어난 독자적인 ‘권위’까지 만들어내게 되는 경우에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갈등은 더욱 고조될 수 있다. 그런데 사적 이슈가 중간의 매개체 없이 곧 바로 사회성을 지닌 이슈로 전환되고, 이에 대해 국가가 직접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중간에 위치하며 중재의 역할을 해 온 정당 등 대의제 기구의 역할을 크게 축소시켰다. 다시 말해서, 국가와 시민 개인 간의 갈등과 충돌은 보다 빈번해졌지만 그 과정에 정당이 개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정보화의 진전이 의사표현이나 의견 결집 등 정치 ‘과정’ 속에서 정당의 역할을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정치적, 사회적 결과’에 대한 문제에서도 정당의 기능을 또 다시 위축시키고 있는 것이다.

○ 제4장 결 론

정보화의 진전은 과거 정당, 국가, 거대 언론 등 일부 기구의 정보와 지식의 독점을 해체하고 정보 획득과 확산·해석에 있어서 민주화, 탈매개화라는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이로 인해 동원의 대상으로 존재해 온 시민사회가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사회적인 의제를 설정하고 이해관계를 집약·표출해 내는 적극적인 역할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다. 정보 통신 매체의 기능적 융합과 사회적 네트워킹의 강화라는 디지털 컨버전스의 추세는 이러한 시민사회의 적극적 역할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앞에서 살펴 본 네 가지 변화는 디지털 컨버전스가 진행될수록 더욱 큰 어려움을 정당과 의회라는 대의제 기구에 주고 있다. 디지털 컨버전스라는 기술적 변화가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니라 선순환의 정치과정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당과 의회가 배제되고 있는 이러한 현상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점은 정치적 책임성(political accountability)에 대한 것이다. 책임있고 제도화된 정치적 매개자로서의 정당과 의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정당과 의회 등 대의제 기구는 디지털 컨버전스로 인한 정치적 정보 유통의 변화를 정확히 인지하고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 변화를 이끄는 정보사회의 정치적 매개자로 거듭나야 할 시급한 목표를 갖고 있다.

□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

▶ 시민사회의 역동성에 대한 이해와 수용: 쌍방향 소통과 정책적 신뢰 획득의 중요성

디지털 컨버전스의 추세는 시민 개인의 정치적 정보 역량을 크게 강화시켰다. 과거처럼 국가, 정당, 언론 등에서 제공한 정보를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시민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확산하며 그것을 토대로 정치적 영향력을 만들어 가는 적극적인 주체가 되었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위해서는 ‘일방적인’ 추진을 지양하고 구체적이고 솔직한 정보 제공을 통한 논의의 활성화와 그것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정보 제공과 함께 쌍방향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정책 추진에 대한 대중의 신뢰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되었다.

▶ 정당, 의회 등 대의제 기구의 대응이 시급: 정치적 책임성과 제도적 안정성의 확보의 중요성

디지털 컨버전스로 인한 시민 개인의 정치적 정보 역량의 강화는 전통적인 대의제 기구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제 설정, 정치적 동원, 의사결정과 확산 등 정치과정의 중요한 기능이 대의제 기구와 무관하게 인터넷 공간 내에서 모두 이뤄질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시민사회의 자율성 제고와 민주주의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정치적 책임성과 제도적 안정성이라는 차원에서는 적지 않은 문제점도 낳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과거 산업시대에 기반한 정당 조직이나 의회 운영의 형태로는 정보화의 진전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수평적이고 유연한 새로운 조직적 대응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갈등, 마찰의 가능성 증대: 규제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야

디지털 컨버전스 등 정보화의 진전으로 인한 개인의 정치적 정보 역량의 강화는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갈등과 마찰을 증대시킬 수 있다. 특히 인터넷 공간 내에서 스스로 형성되는 ‘권위’는 국가나 전통적인 사회의 권위체제와 충돌할 수 있다. 명명백백한 범죄 행위가 아니라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터넷 공간 내의 자율적 정화 기능과 선별 기능을 최대한 인정하고 수용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규제를 통해 인터넷 공간 내의 활동을 제어하거나 통제하려고 한다면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마찰만 잦아질 것이며, 오히려 국가 권위를 훼손하는 역효과를 낳게 될 것이다.

▶ 일상과 문화, 정치의 결합: 새로운 정치참여 유형에 대한 이해의 필요

정보화 진전과 함께 나타나고 있는 흥미로운 특성 가운데 하나는 정치참여의 형태가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엄숙하고 무거운 이슈를 다루고 나의 일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간주되던 정치가 이제는 인터넷과 함께 가볍고 일상적인 것으로 변화되었다. 또 정치를 문화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방송, 통신이 융합되는 디지털 컨버전스의 시대에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그러나 법적·제도적 규정은 여전히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인터넷 공간 내의 활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경우가 자주 생겨나고 있다. 디지털 컨버전스는 이러한 변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인 만큼 관련 법적·제도적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의회, 정당 등 대의제 기구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디지털 컨버전스와 그로 인한 개인의 정보 역량 강화는 대의제 기구의 전통적 역

할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수동적으로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개방적인 충원, 정당 정체성의 상대적 유연화, 수평적 네트워크의 구축, 당내 민주주의 강화, 당내 의사소통의 강화 등은 정당, 의회 등의 대의제 기구가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는 중요한 방안이 된다.

제1장 서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래의 일로 간주되었던 디지털 컨버전스(digital convergence)는 이제 현실의 일부가 되어 가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통신, 방송, 인터넷 등 각 매체 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하나로 융합되는 현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그와 관련된 정보 통신, 방송 등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행동 양식에도 상당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밖에 없다. 인터넷의 출현이 한국 사회 전반에 미친 거대한 변화를 감안할 때 디지털 컨버전스라는 정보 통신 환경의 ‘질적 전환’은 향후 한국 사회에 또 다른 큰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정보화 사회의 도래로 인해 정치 영역에서도 온라인을 통한 보다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정치적 견해의 결집,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정치적 집단행동 등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정치 참여가 이제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다. 정치적 정보의 생산, 유통, 확산 체계 역시 크게 변모했다. 정당, 언론, 이익집단 등 제도화된 기구나 거대한 자본을 필요로 하는 중간 매개 기관의 중개나 개입 없이도 ‘시민 개인’이 각자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고 확산하고 해석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정치적 정보 유통 과정에서 중간 매개체의 역할과 영향력이 축소되는 대신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활동의 중요성이 증대된 것이다.

그런데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도래는 이와 같은 정치적 변화의 추세를 질적으로 보다 심화(deepening)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 망에 고정되어 있어야 했던 이전 상황과 비교할 때 디지털 컨버전스는 유비쿼터스(ubiquitous)의 환경으로 인해 커뮤니케이션 활동의 공간적, 시간적 유연성을 증대시켜 주고 있으며, 방송, 전화,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개인의 ‘정보 역량’을 그만큼 강화할 수 있다. 즉 디지털 컨버전스는 개인의 정보 획득의 능력과 기동성을 강화함으로써 정치적 정보의 생산과 전파에 대한 시민 개인의

능력을 증대시켰다.

이에 대한 좋은 예가 최근 선거 부정과 관련한 이란 시위 사태에서 드러난 ‘트위터’(www.twitter.com)의 위력을 들 수 있다. 이란 정부는 시위와 발포 사실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구글’(google)이나 ‘유튜브’(YouTube)를 차단했지만 트위터는 효과적으로 막지 못했다. 이란 정부는 인터넷 사이트의 아이피를 막는 형태로 정보 차단을 시도할 수 있었지만, 휴대전화나 스마트폰 등 모바일 단말기를 토대로 한 ‘트위터’는 쉽게 막을 수 없었던 것이다. 비단 이란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있었던 2008년 촛불집회 역시 디지털 컨버전스로 인한 시민의 자발적 조직화와 동원에 대한 새로운 추세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디지털 컨버전스의 진전으로 개인 미디어와 SNS (Social Networking Service)가 결합하면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정치 참여의 모습이 나타났다. “다음(Daum) 아고라와 같은 포털 공론장을 통한 집단지성의 발현, 개인 블로그를 통한 거대한 의제 확산의 네트워크의 구축, 소규모 커뮤니티인 인터넷 카페를 통한 광범위한 시민 조직화와 동원, 아프리카와 칼라TV 등 UCC 채널을 통한 실시간 온라인-오프라인 네트워킹 현상” 등은 디지털 컨버전스가 몰고 온 시민의 정치적 정보 역량의 강화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허태희·장우영, 2008: 149).

그런데 개인 중심적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강화와 시민 개인의 정보 역량의 강화는 정치적 정보 획득이나 소통, 정치적 결집이라는 측면에서 전통적인 채널의 역할을 행해온 정당, 그리고 대의제의 핵심적 기제인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방송, 통신의 기능적 융합에 기초한 개인 미디어의 강화, 그리고 SNS라는 사회적, 기술적 현상이 결합하면서 이제는 보다 효과적으로 시민이 개인적 수준에서 얼마든지 정치적 정보를 획득하고 공유하고 이해관계를 결집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디지털 컨버전스라고 하는 기술적 진보와 그로 인한 생활양식의 변화는 시민의 정치 참여와 정치적 의사소통의 방식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정치제도 내에서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을 담당해 온 전통적 기구들의 역할에도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오고

있다. 특히 디지털 컨버전스라는 기술적 진화는 인터넷 등장 이후 지속되어 온 정치 변화의 흐름을 더욱 강화시키는 한편, 정당, 의회 등 전통적인 대의 기구와 시민 간의 ‘관계’에 대한 질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런 변화에 주목하면서 디지털 컨버전스라는 기술적 진보가 근대 사회 이후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 온 의회와 정당과 같은 대의제 기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제 2 장 디지털 컨버전스와 대의제

제 1 절 정보화와 대의제 민주주의

디지털 컨버전스는 디지털 기술로 인한 미디어 환경과 소통 양식의 변화로 정보, 콘텐츠가 다른 영역을 넘나들어 부문 간 경계가 약화됨으로써, 기존의 이질적 요소들이 모이고(수렴), 섞이고(혼합), 바뀌고(변형), 거듭나거나(재구성) 새로운 것으로 창발하는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컨버전스라는 말 그대로 영역 간 경계가 약화되고 기능적으로 통합되는 기술적 진보로 인해, 인간의 행동 패턴에 변화가 생겨나게 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디지털의 기술적 변화가 인간 행동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본다면, 디지털 컨버전스는 기술, 서비스, 산업 등이 디지털을 매개로 수렴되거나 분화됨으로 인해 정치행위자의 제도적 개입, 조정과 시민, 소비자의 참여를 둘러싼 기존의 조직과 행동 양식이 통합되거나 재구조화 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미디어로서 인터넷이 갖는 특성과 관련이 있다. 인터넷은 단일 미디어가 아니라 다양한 양식의 미디어 양식을 네트워크 기반에 통합한 융합 미디어(convergence media)(장우영, 2007: 104)이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정보, 통신, 방송 등 다양한 기능이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의 관심은 이러한 기능적 변화가 대의제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글에서의 전제는 디지털 컨버전스가 개인의 정보 역량 강화로 이어지게 된다면 그만큼 정치 과정상의 중간 매개 집단에 대한 의존성이 약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즉 대의제의 주요 기구인 정당과 의회는 그 역할이나 위상이 지금보다 약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 ‘대의제의 위기’라고 부를 만한 현상은 사실 1970년대 이후 서구 정치에서

사회 계층의 이동성 증대나 이념적 분화, 새로운 이슈의 출현 등 정치사회적 변화와 함께 시작되었다. 그 이후에도 탈산업화, 세계화의 진전과 함께 대의제 민주주의가 국민의 의사와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게 되면서 정당성이나 효율성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대의제 민주주의는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해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정보화의 진전이 대의제 민주주의나 정당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기존 연구는 대체로 거시적인 시각에서 변화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에 대한 평가는 상반된 두 가지 시각으로 나뉜다. 첫 번째 입장은 정보화의 진전이 정당 체계의 재편이나 대의민주주의의 변화로 이끌게 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은 국민과의 직접적인 협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당을 비롯한 중간조직들이 이익대표의 기능을 상실”하게 하며, “시민들은 더 이상 자신의 의사결정권을 정치적 대표자에게 위임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도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당의 기능이 급속히 약화되고 대의민주주의로부터 보다 참여가 강조되는 직접민주주의적인 형태로 변모하게 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인터넷이 효과적으로 정당을 대신함으로써 “정당은 주변화하고 정당 없는 정치(partyless politics)가 활성화될 것”(장우영, 2007: 97)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시각은 정보화가 정보의 획득, 확산, 공유 등 소통에 있어 개별 시민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치 참여나 정치적 동원에 있어서 개별 시민의 권한이 강화될 것이라는 ‘수요자 중심’의 정치 과정에 대한 기대감의 반영이기도 하다. 과거처럼 정당이나 정치 엘리트들이 정당 조직을 통한 동원이나 의제설정 등을 통해 정치적 주도권을 행사하고 정치적 정보의 제공과 해석의 기능을 담당했던 ‘공급자 중심’의 정치과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시각에서는 정보화의 발전이 결국 기존의 대중정당적 정당 구조를 퇴조시키고 사이버 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정당 조직 형태가 출현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결과 오프라인에서 대규모 조직을 유지해 온 기존 정당이 갖는 조직상의 우

월감이나 제도적 유리함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만큼 정당체계 역시 유동적으로 변화해 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요약하면, 정보화의 진전이 대의제의 근간을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윤성이·장우영, 2007: 85).

이와 상반되는 두 번째 시각은 정보화의 진전에 대해 정당과 의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적응해 갈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다. 정당이 주도적으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도입하고 이용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자신의 지지자 집단을 관리하고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는 정보화가 기존 대의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약화시키거나 정당체계의 재편으로 이끌 것이라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정보화의 진전이 정당체계나 의회라는 대의제의 역할을 결코 약화시키지 않으며 오히려 내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권자 및 지지자들과의 연계를 강화해 갈 것으로 본다. 정보화로 인한 의사소통의 효율성 증대와 네트워크의 중요성 강화가 기존 정당 조직 (그리고 의회 정치) 등과 적절하게 결합될 수 있으며 이는 정당, 의회가 전통적으로 담당해 온 대의제 기구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게 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이러한 시각에는 과거에도 정당 정치가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과 함께 유사한 도전에 직면했지만 이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내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예컨대, 매스 미디어의 보급과 확산에 따라 과거 지구당을 중심으로 한 당원의 조직과 교화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변화를 맞이했지만, 동시에 정당은 매스미디어를 통한 선거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고 조직 형태도 대중정당으로부터 선거전문가 정당(electoral-professional party, Panebianco, 1988)으로 변모해 갔다. 최근 인터넷의 등장 역시 정당의 약화보다는 정당 내부의 의사소통과 당내 정책 결정 구조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오히려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정당과 지지자들 간의 연계를 더욱 든든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당을 이끄는 정치 엘리트의 반응성과 책임성을 촉진하는 한편, 정당과 정치엘리트들의 정치적 지배력을 복원하여 전통적인 공급자 중심 정치과정을 강화시킨다는 것이다(윤성이·장우영, 2007: 85-6).

정보화로 인한 정치적 변화에 대한 이와 같은 상반된 예상은 흥미로운 시각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 두 가지 주장을 요약하면 정보화가 대의제의 기반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킬 것이라거나 혹은 정보화가 기존 대의제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정반대의 시각을 담고 있다. 그러나 사실 이런 두 가지 시각 모두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어떤 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예상은 일종의 이념형적 구분이거나 지나치게 한 방향으로 편향된 시각을 대표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특성이 생겨나게 된 까닭은 이러한 예상이 일상의 정치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구체적인 현상에 대한 분석에서 출발한 것이라기보다, 정보화로 인한 거시적인 사회적, 정치적 결과를 추론한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 컨버전스를 포함한 정보화가 이끌고 있는 정치적 현상의 결과를 제대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미시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인 정치적 현상에 대해 주목하는 일이 보다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정보화가 정치 영역에 미치고 있는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현상이 2002년 이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컨버전스가 대의제 환경과 정당 정치에 미친 영향에 대한 논의 출발점은 미시적이고 일상적인 변화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제2 절 디지털 컨버전스로 인한 정치적 소통의 변화와 대의제

정보화 사회 도래 이후의 정치과정은 ‘조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크게 네 가지 차원에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정치 조직의 단위이다. 기존의 정당 조직은 집단적 정체성을 토대로 형성되었다. 예컨대, 근대 사회에 출현한 대중정당과 같은 정당 조직이 생겨나게 된 것은 근대사회에서 새로이 선거권을 부여 받은 노동계급 유권자에게 정치적 정보와 해석을 제공하고 이들을 정치적 교화시키고 조직화시킴으로써 정당에 대한 충성스러운 지지자들로 묶어내겠다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노동 정당의 조직 단위는 ‘노동자 계급’이라는 집단이다. 이외에도 종교, 지역, 인종, 언어 등 다양한 형태의 집단적인 정체성이 정당이

라는 정치 조직을 구성하는 근간이 되었다. 개인적으로 성취해 낼 수 없는 정치적 성과물을 집단의 형성을 통해 구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런 조직 형태에서 개인은 무기력하거나 매우 제한된 역량만을 가진 존재이며, 집단으로 결집된 요구가 정치적 힘으로 전환되는 핵심 요건이었다. 정당에 대한 지지나 의존은 이런 상황적 조건 속에서 유지되고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정보화의 도래 이후 나타나는 큰 변화는 정치과정 속에서 개인의 정치적 정보 역량의 증대이다. 정보화 시대의 도래 이후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네트워크 속에 누구나 쉽게 다가서고 또 의견을 피력할 수 있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제를 형성하고 확산시키는 데 개인의 영향력이 크게 증대되었다. 즉 정보 획득, 해석, 확산 및 소통, 그리고 정치적 결집이라는 측면에서 시민 개인이 행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은 크게 늘어났다. 특히 이러한 특성은 디지털 컨버전스와 함께 더욱 강화되고 있다. 예컨대, 유비쿼터스 시대에는 정치적 정보 획득을 위해 유선망에 접속해야 할 필요성이 없어진 만큼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정보를 주고받고 확산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디지털 비디오, 디지털 카메라, 무선전화기, 인터넷 등이 서로 손쉽게 연계되면서, 무선전화기를 통한 문자 주고받기(text-messaging)에 의존했던 과거의 ‘스마트몹(smart mob)’과는 비교될 수 없는 막강한 수준의 정보 역량을 지니게 된 것이다. 요컨대, 정치과정 상에서 각 개인의 역량 강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만큼 전통적인 정치과정에서 매개체의 역할을 해 온 정당, 그리고 궁극적으로 의회의 개입의 필요성은 줄어들고 있다. 정치 참여의 단위의 측면에서 볼 때, 계급, 종교 등 집단적 정체성에 기반한 조직을 단위로 이뤄졌던 정치 과정은 이제 ‘개인’이 주도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처럼 집단적 정체성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정당은 어떻게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시민 개인’들을 조직하고 지지를 이끌어 낼 것인지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두 번째로 들 수 있는 점은 정치 과정 상에서 나타나는 조직적 특성의 변화이다. 대중정당을 예로 든다면, 과거 조직의 특성은 지지자들을 교화시키고 조직화하기 위해 위계적이고 중앙집권화된 형태였다. 이 때문에 대중정당 조직 활동의 주도권

은 당 지도부와 중앙당, 당 관료와 같은 당 조직이 갖고 있으며, 당원의 참여는 지역 별, 선거구별로 위계적인 조직망을 갖춘 당 조직을 통한 동원에 의해 이뤄졌다. 당의 강령이나 주요 정책 역시 중앙당에서 만들고 결정한 내용이 위계적인 조직망을 통해 상의하달 식으로 전달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즉 대중정당 시대에는 다수 지지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조직화하기 위한 위계적이고 중앙집중화된 당 기구의 역할이 중요했다. 그러나 인터넷의 시대에 근대산업 사회의 정치를 반영하는 이러한 대중정당적 모델은 아무래도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정보화 시대 이후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조직의 특성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보화 사회의 등장 이후 사회적 연계망, 혹은 네트워크는 사회적 현상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되었다. 대중정당으로 대표되는 과거의 정치적 결집 방식이 위계적이고 하향적이고 동원과 교화에 크게 의존했다면, 정보화 사회에서의 정치적 결집 방식은 역시 수평적이고 자율적인 네트워크의 형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정치적 결집과 관련한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는 보다 역동적인 과정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네트워크를 구조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내부에서 이뤄지는 상호작용, 곧 참여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의 결과물로서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네트워크의 구성을 강조하는 것은 구조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행위자의 정치적 성향과 활동의 스펙트럼을 확대하고 행위자에 대한 경험적 이해의 틀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컨버전스가 물고 올 변화를 이해하는데 보다 적절하기 때문이다. 즉 새로운 정치 참여의 조직형태는 네트워크 자체에 담겨진 관계들의 결과물로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경재(2008: 157)는 2008년 촛불집회를 평가하면서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지식정보의 가치 증대라는 두 개의 자양분을 바탕으로 참여적인 디지털 시민에 의해 기술이 사회적으로 수용되고 임파워먼트(empowerment)가 향상되는 ‘네트워크 형 시민운동(networked civil movement)’이 등장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김용철(2008: 123)도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새로운 형태의 사회운동을 “분절적(segmentary)이며 다중심적(polycentric)이

고 느슨한 형태로 연결된(loosely networked)”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 조직의 특성이 위계적이고 중앙집권화된 형태로부터 수평적이고 자발성을 근거로 한 네트워크 형 조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면 기존의 정당 조직으로서는 쉽게 대응하기 어려운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정치 참여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이해관계 혹은 이슈에 대한 것이다. 과거 근대 사회에서 정치적 결집의 목표는 ‘물질적 가치’의 배분에 대한 것이었다. 좌-우로 대표되는 계급 정치가 추구하는 것은 평등한 물질적 가치의 배분 혹은 경쟁을 기반으로 한 시장질서의 유지와 변화 간의 갈등이었다. 이와 함께 러시아 혁명의 성공 이후 좌-우의 물질적 가치의 배분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고 하는 체제 간의 대립,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다양한 경성 이슈(hard issues), 혹은 상위 정치(high politics)가 정치적인 경쟁 속에서 제기하는 중요한 이슈였다. 냉전 시대를 예로 든다면, 국제 질서, 국방이나 안보, 국가보안법 등과 같은 ‘무겁고 심각한’ 이슈가 주요 정당 간 추구하는 정치적 가치의 차별화를 이끌었다.

그러나 정보화 시대에 정치 과정에 참여하게 하는 요인은 물질적 가치이거나 경성 이슈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이보다는 실생활과 관련된 복지, 보건, 환경, 교육, 문화 등 하위 정치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커졌다. 탈냉전, 탈이념, 민주화된 공간 속에서 내가 쉽게 실감할 수 없는 ‘상위 정치’ 영역 보다는 내 생활 주변에서 흔히 접하는 다양한 일상적인, 그리고 ‘가볍고 재미있는’ 문제에 대해서까지 관심이 확대된 것이다(강원택, 2007: 60-64).

특히 이런 이슈의 특성은 의사표출의 수단이 변화하면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정보화의 진전이 일상적인 정치적 의사소통의 양식과 참여의 형태를 변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는 더 나아가 정치적 관심사의 특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컨대, 인터넷의 개발과 뒤이은 이메일의 등장으로 인해 서한의 활용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것처럼, 디지털 컨버전스의 환경은 그에 부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생활양식을 만들어 낼 것이다. 특히 최근의 추세처럼 개인의 휴대전화를 중심으로 디지털 컨버전스가 가속화될 경우, 의사소통은 장문의 내용을 담기보다 핵심적 메

시지를 중심으로 하는 단문적인 형태가 되기 쉽다. 이런 상황이라면 정치적 의사소통의 형태 역시 정치적 담론의 교환이나 깊이 있는 논쟁보다는, 사실이나 결과에 대한 짧은 의사 전달, 그리고 보다 강한 자극을 주는 감성적인 메시지를 주고받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지극히 일상적인 사안이 정치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사건으로 간주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형태로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 하에서는 사회적 의사형성의 과정에 변화가 생겨나는 것이다. 이는 또 다시 여론 결집의 주체인 대의제의 기구들, 의회나 정당의 여론 수렴 방식이나 대응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즉 정보화의 진전은 정당의 반응성(responsiveness) – 각종 생활 이슈에 대해 정당이 어떻게 일일이 대응해 낼 수 있을 것인지 – 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네 번째는 정보화의 진전이 공적 영역과 사적 이슈 간의 갈등을 가속화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갈등 속에서 정당 등 매개체의 중개 역할이 마땅치 않아 보인다는 점이다. 과거에 사회적으로 공론화되는 이슈는 정당이나 언론, 이익집단 등 정치과정상의 매개 집단이 ‘선택하고 주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인터넷 등장 이후에는 이러한 중간 매개 집단의 도움 없이 개인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제를 설정해 낼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사회적 의제 설정이 ‘개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네트워크를 통한 연계가 개인적 관심사가 사회적으로 커다란 중요성을 갖는 이슈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놓았기 때문이다. 즉 친구나 지인에게 보낸 개인적인 메일이나 혹은 사적인 공간으로 운영해 온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올려 둔 자신의 글, 혹은 다른 사람의 글을 읽고 올려놓은 댓글 등이 인터넷 공간 내에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 확산되어 가게 되면, 애당초 사회적 의미를 인식하지 않은 채 행한 ‘사적 행위’가 사회적 의미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공공성을 강조하며 이를 제약하거나 개입하려는 국가와, 행위의 사적 속성을 주장하며 이에 맞서는 시민사회 간의 갈등이 생겨날 수 있다. 다시 말해 사적인 행위와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시민과 그 행위의 공공성, 혹은

결과의 공적인 속성(혹은 그 가능성)을 중시하는 국가 간에 대립되는 입장의 차이가 생겨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은 국가와 시민사회 혹은 국가와 시민 개인 간의 직접적 대립 속에 발생하는 것이며 그 사이에 갈등 해소의 주체로서 의회나 정당이 개입할 여지는 매우 줄어들다. 정치과정 상의 주요 행위자로서 이들 기구의 위상은 그만큼 취약해지는 것이다.

디지털 컨버전스로 인한 이러한 네 가지 변화는 결국 정보화의 진전 속에 나타나는 새로운 정치 과정 상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불가피하게 의회 정치, 정당 정치로 대표되는 대의제 민주주의에도 의미 있는 변화를 몰고 오게 될 것이다. 각 변화의 속성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각각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제 3 장 디지털 컨버전스와 정치 과정의 변화

제 1 절 네트워크화된 개인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

정치적 정보의 생산, 유통, 확산을 둘러싼 관련 사회적 주체들의 역할과 기능 및 그들의 관계는 정치 구조와 한 사회 내의 정치적 권력 관계를 대표하고 있다. 정치적 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어느 특정 집단이 독점하고 있다면 사회적 권력은 그 집단을 중심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중정당 시대에 중앙당이나 당 관료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매스 미디어 등장 이전의 시대에 정치적 정보의 획득과 해석, 그에 대한 의미 부여의 역할을 이들이 사실상 독점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정보화가 정치적으로 커다란 의미를 지니는 것은 이러한 정치적 정보 소통의 메커니즘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면서 정치적, 사회적 권력 관계에 상당한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은 다른 어떤 매체와 비교해도 “가장 이용자 중심적인 미디어로서 각 노드(nodes)에 편재되어 있는 많은 시민들에게 전혀 없는 정치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장우영·송경재, 2007; Kahn and Kellner, 2004)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과거에는 정당이나 언론, 이익집단 등을 통해 조직화된 여론을 형성하여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었지만 인터넷의 등장 이후에는 이러한 ‘매개적’ 채널에 의존하지 않고 각 시민이 직접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또한 정치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정보 획득에 있어서도 이전에는 언론이나 단체, 정당 등 중간 매개 집단에 의해 해석하고 평가된 정보를 일반 시민들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했다면,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정치적, 사회적 사건에 대해 해석되지 않은 원래의 정보에 접할 수 있게 되었거나 혹은 소수의 해석에 의존할 필요 없이 현상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인터넷 등장 이후에는 과거 정당, 언론, 이익집단 등이 여론의 형성, 전달 과정에서 누렸던 게이트키퍼(gate-keeping)이나 의제 형성(agenda setting)의 권한은 크게 축소되었고, 그만큼 과거 이들 중간 매개 집단이 지니고 있던 권한과 기능이 이제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이들에게 개방된 것이다. 즉 다양한 방식으로 각 정치 주체들이 자신의 견해를 표출시킬 수 있는 소통적 민주주의(communicative democracy)가 정보화의 진전으로 강화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치적 소통 구조의 변화는 시민 개인으로 구성된 시민 사회와 정당 및 의회 등이 대표해 온 대의제 정치 제도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해 왔다. 정보화가 정보와 지식의 독점을 해체하고 다수가 공유하거나 접근가능하게 만듦으로써 개별 시민의 정치적 정보 역량을 높이는 이러한 현상은 특히 최근 한국 사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중심의 정치 과정에서’ 대체로 수동적인 정치적 동원의 대상으로 남아 있었던 시민사회가 이제 정치 참여와 관련하여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존재로 재조직화 되고있다. 인터넷을 매개로 시민사회 내부의 다양한 집단들이 적극적으로 이해를 표출하고 의제설정의 권한을 행사하며 정치적 의사 표출과 결집의 역량을 확대해 가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시민의 참여는 네트워크화된 개인주의(networked individualism)라는 특성과 관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카스텔, 2004: 177; Wellman et al., 2003). ‘개인주의화된 정치참여’(이원태, 2004) 혹은 ‘나 홀로 정치참여’(임혁백, 2009: 236) 등으로도 불리는 네트워크화된 개인주의는 고립된 개인들의 결합이 아니라 일종의 사회적으로 형성된 관계망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개인들을 의미한다. 네트워크화된 개인주의는 조직의 결합 강도가 그리 강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또 지리적으로도 분산되어 있지만, 다수가 참여하는 협력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유연성을 갖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다(이원태, 2004: 1129-30). 즉 과거 대중정당 시대의 결집처럼 계급과 같은 강한 정체성을 갖는 집단, 공동체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 차원의 결합이지만 참여를 통한 협력과 상호소통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네트워크화된 개인주의이다. 이들은 분산되어 있고 독립적인 개인이

지만 인터넷을 통한 관계의 망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며, 이러한 관계망 속에서의 연결이 스스로의 존재감과 협력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망 속에서의 연결은 단순한 ‘사람 사귀기’를 넘어서 연결을 통한 새로운 정체성의 확립,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적, 문화적 실천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이동후, 2004: 69). 네트워크라는 관계망, 관계망을 통한 연결, 연결 속에 이뤄지는 협력과 실천,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의 형성이 인터넷 시대의 참여와 협력의 주요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산업사회의 시민이 계급 혹은 이익 등에 기초한 ‘강한 연대(strong tie)’에 의해 정치적으로 동원되었다면, 네트워크 사회에서의 시민은 취미와 재미, 그리고 무엇보다 네트워크에의 참여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약한 연대(weak tie)’를 수성하고 네트워크를 통한 독립적인 참여 시민으로 재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윤성이 외, 2008: 81).

이는 대의제 민주주의나 정당 정치와 관련하여 생각할 때 변화된 환경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정당으로 대표되는 대의제 정치과정에서 정당 정치의 존재 기반의 변화를 설명해 준다. 정당의 핵심 지지층의 특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집단적 정체성의 약화이다. 계급, 지역, 종교, 언어, 인종 등 외생적 요인(exogenous factors)에 의해 집단적 정체성이 규정되고, 그러한 정체성에 기초한 정치적 연대가 정당에 대한 집단적 지지로 이어졌던 근대 대중정당의 시대와는 명백히 상이한 정치적 환경에 놓이게 된 것이다. 즉 이제 네트워크화된 ‘개인주의’ 구조 하에서는 집단보다는 개인이 정치 참여의 중요한 단위가 된 것이다.

한편, 집단 정체성으로부터 비롯되는 한 연대감과 충성심은 조직 구조의 경직성, 권위주의로 이어지기도 했다. 대중정당에서 찾아볼 수 있는 위계적이고 중앙집중화된 조직적 특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네트워크화된 개인주의에서는 유연함, 느슨한 결합, 협력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특성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대중정당의 조직 형태와는 뚜렷이 구분된다. 무엇보다 큰 차이는 인터넷 공간상에서 형성되는 관계망은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구조가 아니라 행위자들 간의 자발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되는 구조라는 점이다. 즉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참여한 참가자

들의 행위에 의해 내부적으로 구성되는 관계망인 것이다.

그런데 디지털 컨버전스는 인터넷 등장 이후 진행되어 온 이러한 정치 참여의 변화 추세를 더욱 빠르고 강력하게 이끌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양한 정보 생산, 획득, 유통의 매체가 한 곳으로 모이고, 또 유비쿼터스 환경 속에서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개인이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것이 정당과 의회 등 전통적인 대의제 기구의 역할과 기능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2008년의 미국 쇠고기 수입 관련 촛불집회에 대한 정보의 생성과 유통, 확산의 과정이다. 서울 도심에서 일어난 촛불집회의 상황은 당시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제도권 미디어가 아니라 개별적 시민이 직접 취재하고 방송한 1인 미디어에 의해 이뤄졌다. 이러한 1인 미디어 방송은 대표적으로 개인 방송 사이트인 ‘아프리카(www.afreeca.com)’를 통해 실시간 중계되었다.

“아프리카의 2008년 6월 2일 현재 누적 시청자 수는 4백만 명에 달하며 개설된 방마다 200명 이상이 입장 가능했다. 이 서비스는 3만 명의 동시 시청이 가능하고 보통 하루 평균 100여 명의 시민이 방송을 개설하는데 하루 시청자만 100만 명이 넘는 경우도 있다. 5월 25일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하여 살수차가 등장했던 현장 방송은 30만 7천 여 명이 시청하였으며 이날 하루 촛불시위 관련 방송 수만 1,363개에 달했다. 6월 1일 촛불집회가 대규모가 되면서부터는 하루 방문자 수가 72만 명에 달하여 2주 전 대비 100%가 증가하기도 하였다”(조희정 · 강장목, 2008: 326-7).

여기서 주목할 점은 촛불집회의 중계자와 집회 참가자가 서로 구분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과거처럼 사건의 당사자와 구분되어 정보를 취재, 해석하고 전파하는 매개적 역할을 해 온 언론이 아니라 그 현장에 참여한 시민 개인에 의해 중계가 이뤄졌다. 이처럼 전통적인 정보 생성의 경계를 허문 1인 방송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디지털 컨버전스라는 기술적 변화 때문이었다. 촛불시위에 대한 1인의 실시간 현장 중계의 모습은 디지털 컨버전스로 인한 개인의 정보 역량 강화와 그로 인한 정치적

영향력의 증대가 단지 이론적인 추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변화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사실 2008년 촛불집회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2002년 대통령 투표일 전야에 있었던 정몽준의 노무현 지지 철회 소식에 대한 노무현 지지자들의 대응이 바로 그것이다. 선거일 전야에 터진 일이었기 때문에 사실 대중매체에 의존해야 하는 시대였다면 TV, 라디오 등을 통해 흘러나오는 뉴스를 청취하는 것이 상으로 노무현 지지자들이 마땅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보화의 시대에 인터넷과 휴대전화는 노무현 지지자들의 입장에서 시급한 상황에 대한 매우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정몽준의 지지 철회 소식에 대한 소식과 행동지침은 즉시 노사모 홈페이지와 휴대전화를 통해 회원들에게 전파되었다.

“선거운동이 종료된 자정 이후에도 노사모 홈페이지의 방문자수가 폭증하고, 같은 시간대 전화 사용량도 30% 이상 급증하였다. 투표일에는 최고조를 이루어 접속자수 86만 명, 게시글 3만 건, 조회수 560만 건을 상회하였다. 그리고 노 후보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모바일 문자서비스를 통해 투표참여 캠페인이 확산되어, 젊은층이 투표에 대거 참여하면서 선거의 승패가 바뀌는 결과를 낳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즉 오후 2~3시까지 출구조사에서 이회창 후보에게 뒤지던 노후보가 모바일 투표참여 캠페인의 확산에 힘입어 대역전에 성공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고 휴대폰으로 무장된 스마트 몹(smart mob)의 정치적 파워를 암시하고 있다”(윤성이·장우영, 2007: 89).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이 등장하기 이전임에도 인터넷과 휴대전화만으로도 그 이전이라면 불가능했을 대응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정보화로 인해 개별 시민의 정치적 정보 역량이 크게 강화되는 시대의 정치참여는 일반시민들이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행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요구되는 것은 이들을 이끌고 가려는 중앙집권적 조직보다 이들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무대’, 즉 플랫폼(platform)으로서의 공간이다. 즉 정당이 주도적으로 조직하고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활동이 이뤄질 수 있는 결집의 무대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정치적 정보의 확산 역시 중앙당에서 만들어진

것이 상의하달 식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지지자나 당원, 혹은 유권자들이 개방된 공간 속에 들어가서 스스로 만들고, 지식과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하는 형태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과거처럼 정당이나 정부, 정치인들이 제공하는 공급자 중심의 ‘푸시-드리븐 모델(push driven model)’은 정치적 재화의 질과 내용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을 충족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정치적 수요자들이 자발적으로 정치적 의사소통의 네트워크를 결성하여 정치적 재화를 생산해 내는 ‘풀-드리븐(pull-driven) 참여 모델’이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임혁백, 2009: 245-6). 이러한 변화는 정당이 네트워크 환경에 조용한 형태로 이런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유비쿼터스 환경 속에서 방송, 통신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컨버전스는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정치 참여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트위터를 활용한 이집트의 민주화 운동가의 한 사례에 주목한 서키(2008: 200)는 정보화의 진전이 가져올 개인의 정치적 역량 강화의 추세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사방에 흩어져 있는 그룹을 조율해 내는 능력은 앞으로 계속 개선될 것이다. 아직도 새로운 사회적 도구가 계속 발명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룹으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는 근본적으로 정치성을 띠고 있는 만큼, 어떤 도구든 인식의 공유나 그룹 조율을 개선해 주는 도구라면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것이더라도 정치적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라이프치히 행진에서 시작해 중국이나 카이로처럼 사회적 목적을 띠고 실시간으로 문자 메시지를 사용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확장시켜 주는 도구를 채택해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더욱 의미심장한 사실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는 그런 능력이 더 확장되도록 도구를 수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당 정치는 민주화 이후 지역이라는 집단적 정체성에 기반해 있었다. 더욱이 지역이라는 제한적이고 봉건적이기까지 한 집단적 정체성으로 인해 우리나라 정당은 보편적인 정치적 가치를 대표할 수도 없었다. 정당이 대표하는 조직적 속성은 지역 간 갈등과 경쟁의 주체로서 지역적 정체성에 묶여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 컨버전스로 더욱 가속화되는 새로운 정치적 환경의 도래로 인해 우리나라

정당은 두 가지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첫째는 지역이라는 집단적 정체성에서 벗어나 어떻게 개인화된 정치 참여의 변화 속에 적응해 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소위 ‘3김’의 정치적 퇴장 이후 지역주의에 기반한 정체성의 약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를 대신할 새로운 지지의 기반, 정치적 정체성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는 보다 근본적인 것으로 정치적 정보 역량이 강화된 개인이 정치과정에서 정보의 획득, 확산, 해석에 주도적인 기능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정책 생산이나 사회적 네트워크의 형성에서 매우 취약한 우리나라의 정당의 역할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다면 정당은 선거 경쟁을 위한 도구(electoral machine) 이상의 역할을 행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정당 스스로의 존재 근거와 기반이 침식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도전 모두 쉽사리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민주화 이후 20여 년 동안 지역주의가 우리나라 정당 지지의 안전판으로 작동했다면, 이제는 디지털 컨버전스의 흐름이 그 조직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다.

제2 절 유연하고 수평적인 정치적 네트워크의 구축과 정당 조직

과거의 정치적 동원 구조는 위계적이며 중앙집중화된 형태의 조직적 특성을 지녔다. 이러한 조직의 특성은 정치적 정보의 획득이나 해석에 있어서 수동적인 입장에 놓여 있던 ‘정보를 갖지 못한 다수 유권자(uninformed voters)’의 정치적 동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중앙당이 그 정점에 놓이며 지역-지구당으로 이어지는 위계적인 조직망이 구축되었다.

그러나 시민 개개인의 정치적 정보 역량이 크게 증대된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네트워크는 중앙집중화된 구조가 아니라 참여자 개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전제로 서로 연결되고 상호 작용을 주고받는 형태로 변모한 것이다. 임혁백(2009; 233)은 이를 두고 “과거에는 연고 집단 구성원, 정당·결사체 등과 같은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조직 중심의 집단화된 정치참여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원적이

고 분산적인 네트워크에 기반한 ‘자율적인 개인들’이나 ‘유동적’이고 ‘임시적’이며 ‘가상적인 조직’이 주도하는 정치참여가 점차 부각되고 있다”고 적절하게 정리했다. 이처럼 네트워크 형태의 조직 속에서는 행위자 개인이 조직상의 중심적 지위를 차지하고 싶다고 해도 그 의도대로 될 수가 없다. 네트워크의 형성 자체 또는 네트워크에서의 구조적 지위의 결정은 행위자 간 상호작용을 거쳐 개인의 의도와는 무관한 예상치 못한 형태로 형성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네트워크상에 중심 세력이 존재하지 않으며 참여자 개개인이 연결되면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윤성이 · 조희정 · 류석진, 2008: 6).

네트워크 형 조직이 중앙집중화된 권력을 대신할 수 있는 강력한 조직 형태로 부각될 수 있는 까닭은 개별적 행위자들이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의 공유와 협력 등의 자발적 상호작용을 거쳐 생성한 결과가 개인의 정보 역량의 합을 넘어서는 질적인 변환을 이끌어 내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상호작용의 결과는 각자가 지닌 것의 단순 합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보화의 진전으로 진화하는 새로운 “웹 구조는 개인과 커뮤니티를 구획하고 정보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커뮤니티를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재생산하며 그러한 자유로운 연동 과정을 통해 집단지성을 창출하고 자기 조직화를 이루어내”는 형태로 변화해 온 것이다(조희정 · 강장목, 2008: 314).

어떤 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변화의 과정은 빔버(Bimber, 1998)가 말하는 ‘두터운 공동체(thick community)’와 ‘얇은 공동체(thin community)’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두터운 공동체는 각 구성원들이 사적 이익의 총합을 넘어선 공동선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이익과 가치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공유하는 공동체이며, 얇은 공동체는 토론, 저항, 투표 등 개별적 관심사나 이해관계에 따라 형성된 다소 느슨한 성격의 공동체를 의미한다. 이원태(2004)는 이를 두고 강한 유대(strong tie)의 공동체와 약한 유대(weak tie)의 공동체라고 불렀는데, 전자는 경계의 문턱이 높고 강한 조직적 제약이 존재하는 반면, 후자는 상대적으로 구성원의 강한 자율성에 기초해서 공동체의 재화 생산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전자가 고전적 대중

정당 조직의 특성을 대표한다면, 후자는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사이버 공간 상에 부상하는 새로운 정치 공동체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시민운동에 관한 송경재 (2008: 157-8)의 관찰은 정보화 이후 부각되는 이러한 정치공동체의 특성을 잘 설명하고 있다.

“네트워크형 시민운동이 가능한 것은 사회 구조에서의 네트워크 확산이라는 배경 때문이다. 여기서 네트워크는 단순히 인터넷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무선 통신, 사회관계의 네트워크, 수평적인 조직 구조의 등장 등을 모두 반영한 것이다. 이런 네트워크 구조의 특성은 바로 네트워크화된 열린 아키텍처(architecture)이자 참여 비용이 저렴하고 수평적인 느슨한 연계구조라는 점이다. 이러한 특성이 기존의 상명하달의 강고한 위계적인 네트워크와는 다르게 형성되고 있고 여기서 주요한 행위자는 기존의 삼각형 조직의 꼭지점이 아니라 느슨한 네트워크의 허브와 커넥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네트워크 구조의 변화는 근본적으로 개인의 능력을 변화시키고 기존 정치과정에서 정치매개집단인 의회, 정당, 언론에 비해 약한 시민단체가 수동적인 독자, 청자, 관찰자의 입장에서 활발한 참여를 촉발시킨 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여기 인용한 문장 가운데 시민단체를 정당이나 정치 공동체로 바꿔 놓으면 정보화의 진전과 함께 나타나는 새로운 정치 조직상의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 된다.

이처럼 네트워크는 개방과 연결에 의해 활성화되는 공간으로서, 속성상 특정 집단의 항구적인 독점을 허용하지 않는다. 즉 어떠한 정치집단도 이러한 구조 속에서 독점적으로 자기이해를 실현하거나 배타적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다. 문제는 이러한 네트워크의 구조 속에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제약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이를 기존의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제도적 기구와 조화롭게 합치시킬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특히 대의제 과정에서 전통적으로 중요한 매개체의 역할을 해 온 정당이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적응해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 핵심적 과제가 될 것이다. 정당은 전통적으로 의제설정, 이해집약, 중개, 동원, 정치 엘리트의 양성 등의 기능을 수행해 왔지만,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대부분의 ‘전통적 기능’이 새로이 등장한 온라인, 오프라인 상의 대체 집단에 의해 도전 받고 있기에 정당의 독점적 지위가 계속해서 유지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제 시민은 정치 과정의 결과물을 소비하는 수동적인 존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

라, 정치적 쟁점의 형성과 확산을 주도하는 등 적극적인 생산자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되었다. 정당과 시민단체에 의해 주도되어온 의제설정, 이해집약, 중개, 동원의 기능은 이제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노드(node) 간의 경쟁에 의해 분산될 수밖에 없다. 2008년 촛불 집회에 대한 다음의 글은 이런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간사 안진걸은 일반 시민과 네티즌들의 창발적 참여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면 때부터 쇠고기 문제를 줄곧 제기해 온 시민단체들을 ‘주인공에서 관찰자로 전락’시켰음을 토로하였다(경향신문 08/06/09). 또한 국민대책회의 상황실장 박원석에 의하면 이번 촛불시위가 ‘리더도 계획된 이동 경로도’ 없는 ‘아메바’식 운동 양상을 띠었던 까닭에 국민대책회의의 위상은 어정쩡한 것이었다고 고백하였다(경향신문 08/06/10). 심지어 경찰 관계자도 ‘촛불집회 초기부터 국민대책회의는 집회만 열뿐, 구체적인 내용이나 진행 방식은 그때그때 시위 참가자들이 알아서 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평하였다(한국일보 '08. 06. 30).”(김용철, 2008: 121).

정보화 이후 나타나는 이러한 정치 참여는 조직적으로는 자율성의 증대와 약한 구속력이라는 특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획일화되거나 위계적으로 조직된 참여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네트워크화된 구조 속에서 협력과 공유를 통한 참여와 정치적 정보의 생성, 확산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2002년 대선 이후 나타나고 있는 정치인 팬클럽 역시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한 예가 될 수 있다. 노사모 등의 정치인 팬클럽은 외형적으로는 정당과 유사한 기능적 특성을 나타내지만 조직의 특성에서는 전통적 정당과는 매우 차별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조직은 기율이 아니라 개인의 자발성으로부터 비롯된 조직화의 예이며, 강한 조직적 제약이나 기율보다는 참여자의 자율성에 의존하는 약한 유대에 기초한 조직이다(장우영, 2007: 106).

전통적으로 참여의 공간이기보다 정치인의 동원 조직으로 기능해 왔던 한국 정당의 그간의 역할을 고려할 때, 노사모 등 정치인 팬클럽의 부상은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새로운 참여와 조직의 형태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러한 참여 동기와 조직적 특성은 한국 정치에서 매우 보기 드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리더-추종자 집단이 개별 정치인의 필요에 의해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형성되고, 리더에 대한 충성과 추종자에 대한 보상이라는 거래관계에 의해 운용되어” 왔지만, “정치인 팬클럽은 아래로부터 자발적으로 형성되고, 기대이익 없이 리더에게 충성심을 제공”(윤성이·장우영, 2007: 87)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컨버전스는 자율성에 기초한 이러한 수평적 네트워크의 추세를 더욱 강화시켜 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환경의 변화에 대해 우리나라의 정당은 사실상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정당 조직은 여전히 자발적 참여보다 정치적 동원을 위한 도구적 속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또한 편으로 위계적이고 중앙집중적인 조직 형태는 당내 민주주의의 결핍이라는 문제점으로 이어지고 있다. 소위 ‘3김 시대’ 이후에도 우리나라 정당의 지도자는 당 조직을 ‘장악’하고 ‘일사불란’한 형태로 당을 운영하려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이런 조직적 특성은 정보화 이후 점차 강화되고 있는 새로운 정치참여 형태에 정당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정당은 새로운 네트워크 환경 속에서 스스로를 재조직해 내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현실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이슈에서 소외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정치 환경에 대한 정당의 부적응, 대의제 기구의 대응의 실패는 정치적 책임성의 확보와 안정적 민주주의의 유지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정당과 의회라는 대의제의 기구가 디지털 컨버전스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적절한 조직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즉, 정보화 시대의 “정당 정치는 과거와 같이 강한 정치적 일체감의 유지, 위계적인 조직과 중앙집권적 당 운영과 같은 대중정당적 특성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하고 느슨한 정체성을 토대로 한 개방적, 수평적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을 핵심적인 개혁 과제로 갖는다. 특히 정당이 개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집단적인 정보의 공유와 기여를 통해 새로운 정보와 지식, 전략, 정치적 정체성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개방된 공간으로 변모”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강원택, 2008: 139).

제3 절 새로운 이슈의 부상과 ‘일상 속의 정치’의 등장

디지털 컨버전스가 대의제에 미치는 또 다른 영향은 근본적으로는 정당 정치가 매개하거나 대의해야 하는 대상으로서의 시민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즉 정당이 ‘무엇을’ ‘어떻게’ 대의할 것인가, 즉 ‘대의’의 대상, 내용, 방식이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서도 지적한 대로, 디지털 컨버전스의 추세와 함께 시민 개인의 정보 역량은 크게 강화되었고 참여의 형태 역시 매개체의 동원에 의한 수동적 참여보다 네트워크를 통한 자발적 참여로 변모했다. 또한 이들은 정치를 심각하고 무거운 것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일종의 ‘놀이로서의 정치’(김용호, 2004: 12-14)로 바라보거나, ‘정치를 문화적으로 수용하는 세대’(류석진 · 이현우 · 이원태, 2005: 164-5)로 볼 수 있다. 조희정(2009: 116-7)은 이를 두고 “‘차가운 인지’(cool cognition)가 아니라 ‘뜨거운 인지’(hot cognition)에 기반한 모니터 시민(monitor citizen)이 등장하면서 ‘감성의 정치’가 ‘이성의 정치’에 못지않게 중요해졌다”고 보았다. 임혁백(2009: 240)은 다음과 같이 이러한 변화의 특성을 정리했다.

“기존의 정치 참여가 합리적 판단, 전략적 선택, 심층적 사려를 요구하는 ‘심각하고 무거운 정치 행위’였다면, 표출적 정치 참여는 정치를 ‘즐거움’ 또는 ‘희열’, ‘정서적 흥겨움’, ‘놀이’의 대상으로 여기는 ‘쾌락적’, ‘축제적’ 정치 참여이다. 이러한 표현주의적 정치 참여는 미래 한국 정치 거버넌스가 규격화, 표준화, 대규모의 위계적 조직화, 합리화, 규율 등을 특징으로 하는 산업화 시대의 아폴론적 정치 참여 거버넌스에서 자발성, 창의성, 개방성, 축제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탈산업화, 탈근대 시대의 디오니소스적 정치 참여 거버넌스로 전화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즉 과거의 이슈가 물질적이거나 경성 이슈에 국한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보다 유연하고 다양한 이슈가 시민들의 관심사가 된 것이다. 물론 정보사회가 도래하였다고 하여 경제, 정치, 안보 등의 거대 이슈의 중요성이 줄어들지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영역의 이슈들에 대해 시민들이 부여하는 상대적 중요성은 분명히

커지고 있다. 산업사회의 정치적 이슈가 이념이나 체제와 연계된 거대 담론 위주였다면 정보사회에서는 시민들의 정치적 관심사가 좀 더 세분화된 생활 이슈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요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이슈는, 사회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개인적인’ 것이라고 할 만한 것에서 출발한 것이 적지 않다. 이전처럼 거대담론이나 집단적 정체성에 기반한 소속감에서 벗어나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소한’ 사안에 대한 관심이 참여의 유인으로 작동하게 된 것이다(강원택, 2007: 62).

한국 정치에서도 과거 뜨거운 정치적 관심사였던 민주 대 반민주, 영남 대 호남의 지역 대결, 적대적 대 유화적 대북 정책 등 이념적이고 거대담론 중심의 이슈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 환경, 건강, 인권, 소수자의 권리, 문화 등의 ‘생활 정치(life-style politics)’ 혹은 ‘일상의 정치’의 상대적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2008년 촛불집회를 ‘반미’로 읽느냐 혹은 ‘쇠고기’로 읽느냐 하는 것은 관점의 차이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만, 적어도 초기에 집회에 참여한 학생, 젊은층, 주부 등의 참여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쇠고기’가 갖는 정치적, 사회적 의미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사소해 보이는 ‘쇠고기’가 정치적 저항의 중심에 놓일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조기숙과 박혜윤(2008: 245)은 촛불집회를 탈물질주의적 이슈로 인한 결집으로 분석했다. 즉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현 집권층과는 매우 다른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로써 촛불집회는 쇠고기 수입 문제를 계기로 문화적 충돌이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다. “값싸고 질 좋은 쇠고기를 수입하면 국민들이 좋아할 줄 알았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대변한다면, 집회 참가자들은 먹거리의 안전성을 중시하고 인간 중심의 사고를 하는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용철(2008: 136-7) 역시 촛불집회는 비정치적 이슈의 정치적 쟁점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주제와는 거리가 먼 ‘먹거리’ 이슈가 대규모 시위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촛불집회는 ‘생활 정치’의 일상화이며 탈물질주의적 문화의 출현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 촛불집회의 성격에 대한 다음의 글 역시 이런 관점을 취하고 있다.

“레몬테라스나 소울드레서 등과 같은 취미와 쇼핑 및 일상의 정보공간에서 조차 주부와 2, 30대 여성들에게는 식탁의 안전과 일상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명박 정부의 무례함이 연결되어 분노를 자극했고 이러한 공간은 젊은 여성들을 결속하고 행동하게 하는 운동의 장으로 작동하였다. 아마도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성장위주의 정책에 가려져 전혀 고려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젊은 여성들은 현 정부에 실망을 넘어서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같다. 누군가 말하지 않으면 생활세계가 돌이킬 수 없는 위기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절박한 문제의식 덕분에 이들은 당당하게 자신들의 문제를 표현하고 서로에게 말 걸기를 시도하였으며 광장에서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았던 셈이다.(이기호, 경향신문 주최 촛불 1년 한국은 어디로 심포지엄, 2009. 4. 30.)¹⁾

즉 대규모 정치적 결집을 몰고 온 관심사가 매우 일상적이고 생활 주변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과거에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 온 이러한 ‘사소한’ 이슈들이 적지 않았다. ‘개똥녀’, ‘전경부대 알몸 진급식’, ‘군 훈련병 인분 사건’ 등이 바로 이런 예가 될 수 있다.

이슈의 속성뿐만 아니라 그것이 제기되는 방식 역시 큰 변화가 생겨났다. 과거였다면 이런 사건들은 사회적으로 공개되기 어려운 제한된 공간 내에서 이뤄진 것들이다. 그러나 이제는 달리는 지하철이나 일반인들이 출입할 수 없는 전경부대나 군 훈련소에서 발생한 일이라도 사회적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건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디지털 컨버전스라고 하는 기술적 진화는 이러한 추세를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즉 일견 사소해 보이는 일이고 또 극히 제한된 공간 내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도 그것에 대한 관찰과 기록이 용이해졌고 더욱이 실시간으로 그 사건을 무유선상의 네트워크를 통해 순식간에 거대한 규모로 확산시키는 일이 가능해졌다. 이처럼 과거라면 정보 유통의 매개적 위치에 놓인 기구에 의해 걸러졌을 만한 사소하고 일상적인 이슈들조차 정보화의 진전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 때문에 ‘인터넷, 휴대폰, PDA 등을 통한 정치참여

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4302349142&code=940100&s_code=as028(검색일 2009. 9. 22).

활성화는 점차 정치과정을 영구적 캠페인의 일상화 또는 권리 주창(advocacy) 정치의 일상화로 바꾸어 놓을'(임혁백, 2009: 241)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이다. 일상적인 이슈라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정보화의 진전, 특히 디지털 컨버전스의 도래와 함께 높아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슈의 다양화는 정당이나 의회 차원에서 제대로 대응하기 힘든 또 다른 도전이 되고 있다. 집단적 정체성에 기초한 '핵심적 이슈' 혹은 '경성 이슈'를 중심으로 정책적 관심사를 집중해 왔던 과거의 정치 과정·대의제와는 근본적으로 변화된 환경에 처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과거처럼 지역주의 균열,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갈등, 혹은 대북 정책 등 반공이데올로기를 둘러싼 갈등과 같은 '경성(硬性) 이슈'에 익숙한 정당 정치가 실질적이고 생활 중심적인 연성(軟性) 이슈에 적절하게 대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정당 정치가 경성 이슈나 '무겁고 심각한 이슈'에만 집중해 있는 사이에 시민들은 정당을 우회하여 인터넷 공간상에 자신들만의 새로운 논의의 장을 만들어 가고 있다. 사회적인 중요성을 갖는 이슈의 속성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정당이나 의회 등 전통적인 정치과정의 매개체들은 쉽게 대응하기 힘든 또 다른 난관에 직면해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이슈의 속성뿐만 아니라 이슈가 제기되는 방식의 변화 역시 정당이나 의회의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다시 말해서 수많은 개인들이 제기하는 너무나도 다양해진 사회적 요구를 정당이나 의회가 과연 얼마나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즉 "개인화된 정치 참여는 하나의 이슈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총체적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것을 어렵게 하고 협소한 이해관계를 뛰어 넘는 정치참여를 어렵게 하여 사회적, 정치적 통합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임혁백, 2009: 242-3). 즉 디지털 컨버전스로 인해 시민 개인의 정치적 정보 역량이 강화되는 추세는 과거에는 정치적으로 조직화되거나 표출되기 어려운 소수 집단의 이해관계나 관심사가 모두 사회적으로 주목 받는 어젠더로 등장할 수 있게 만들고 있다. 일종의 롱테일 정치(long-tail politics)라고 부를 만한 현상이 출현한 것이다(강원택, 2007: 95-117).

이런 변화는 과거 다수의 집단적으로 공유된 이해관계를 대표해 온 정당에게는 또 다른 도전이 될 수밖에 없다. 과거의 정치적 동원이 거대담론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중화된 형태였다면, 정보화의 진전과 디지털 컨버전스의 추세는 다양한 이슈의 등장을 가능하게 하고 탈집중과 탈권위의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있다(윤성이·조희정·류석진, 2008: 6). 그런 점에서 볼 때 인터넷 공간 내에 이뤄진 네트워크상에서 새로운 이슈와 개개인의 자발적 참여를 중심으로 한 관심과 소통이 갖는 정치적 영향력의 증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 정치적 소통과 동원의 주체가 정당, 언론, 시민단체 등이었다면 이제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카페, 커뮤니티, 블로그, 정치인 팬클럽 등이 보다 중요한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정치적 활동에 대한 다음의 글은 정치적 동원과 의사결집 과정에서 소통의 양식과 주체의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Daum)에 설치된 ‘국민을 협박하지 말라’(cafe.daum.net/antitanhaek) 카페는 온라인 탄핵반대운동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국협은 시민사회단체도 노대통령 지지 커뮤니티도 아닌 일반네티즌들의 자발적 결사체였다. 3월 6일 개설된 국협의 회원수는 열흘 만에 9만 명의 회원 수를 기록하였으며, 총선캠페인 기간에는 10만여 명의 회원수를 돌파하였다. 국협 게시판에는 정치개혁, 투표참여, 온라인 촛불시위 등의 제안들이 하루 수천 건씩 올라와 개설 16일 만에 15만 6천여 건의 글이 게시되었고, 페이지뷰는 일일 평균 200~300만 건을 기록함으로써 카페 사상 최고 기록을 선보였다. 국협의 ‘현재의 빠른 결정을 바라는 1,000만 명 서명운동’과 ‘국회의원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위한 서명운동’에는 5만여 명의 회원들이 동참했다. 그리고 회원들은 다른 카페들로 탄핵반대 릴레이투표와 국회탄핵 이모티콘 및 항의메일 전송 캠페인, 의원소환제 입법 운동을 확산시켰다. 이 같은 온라인상에서의 역동적인 쌍방향 커뮤니케이션과 여론 확산은 탄핵을 지지하는 주류 언론의 의제설정을 압도하는 결과를 낳았다”(윤성이·장우영, 2007: 90).

이러한 특성은 2008년 쇠고기 수입 문제를 둘러싼 촛불집회에서도 유사하게 확인되고 있다. 당시 촛불집회에서 기존 정당 정치권은 집회 현장을 방문했을 때 드러난 것처럼 참여 시민들로 냉담한 반응을 얻었고 집회를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에 비해 집회와 관련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 것은 인터넷 상에 만들어진 사이버 커뮤니티였다. 촛불집회를 주도한 사이버 커뮤니티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슈를 중심으로 결집한 사이버 커뮤니티로 ‘이명박 탄핵사이트’,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안티 이명박 커뮤니티’ 등과 같이 정치색이 짙은 사이버 커뮤니티였다. 또 다른 하나는 기존에 취미, 친목 등의 목적으로 결성된 사이버상의 커뮤니티가 사회적 이슈에 영향을 받아 정치 참여의 결집 공간으로 전환하게 된 경우이다. ‘소울 드러서’(패션, 연예 관심 커뮤니티), ‘화장~발’(미용, 연예 관심 커뮤니티) ‘고클래식’(클래식 음악 감상 동호회), ‘82쿡닷컴’(살림 요리 커뮤니티), ‘MLB Park’(야구 애호가 커뮤니티) 등이 그러한 예가 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사이버 커뮤니티의 경우에는 정치 관련 게시판이나 토론방을 두고 있지 않았지만, 자유게시판만으로도 정치 참여의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다음 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유사한 관심사를 토대로 한 새로운 정체성의 확립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다.

“회원 가입은 오래 전에 했지만 활동은 하지 않고 ‘눈팅’만 하는 유명회원이었다. 82쿡에 가입한 건 쓸 만한 식기세척기가 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작년에 사람들 화를 돋우는 일이 생겼고, 회원들이 저마다 글을 올렸고, 그 바람에 나도 글을 올렸다. 처음에는 개인적인 편익을 찾기 위해서 가입했는데, 게시판에 글을 쓰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능동적인 주체가 돼 있었다.”(김수진, 82쿡닷컴 회원)²⁾

셔드슨 (Schudson 1998)은 개인의 정보 역량이 강화되면서 이제 정보에 대한 시민의 태도가 변화되었다고 주장한다. 과거에는 합리적이고 비판적 태도로 정치적 정보를 획득하고 해석하고자 했다면, 이제 복잡한 미디어 환경의 시대에는 정치와 정치적 정보를 ‘모니터 (monitor)’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넘치는 정보 속에서 이제 완벽한 정보 수집과 지속적인 관심을 표시하기보다, 일상적으로는 그저 정치 사회

2) <http://newsmaker.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138&pt=nv>(검색일 2009. 9. 24).

적 상황을 모니터하거나 살펴볼(scan) 뿐이지만, 행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이 되면 그 때서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셔드슨의 주장은 일상적인 이슈에 집중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 정보를 중심으로 걸집하고 행동하는 이들 ‘비정치적 인터넷 공동체’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누구나 정보를 얻어 개인적 편익을 얻기 위해 가입한다. 인터넷 동호회 회원과 일반 직장인의 차이는 이런 것이다. 대부분 직장인은 직장과 술밖에 모른다. 취미생활을 할 여유라는 게 없다. 그런데 취미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주위를 둘러보면서 삶의 여유에 대해 생각한다. 이 정권의 문제는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거다. 취미로 음반이나 디비디를 모으면서 두 번 위기를 맞았다. 한 번은 외환 위기 때고 또 한 번은 작년이다. 두 번 모두 환율이 엄청나게 뛰었고, 공교롭게도 집권당이 같다. 동호회 회원들이 강만수 전 장관을 욕했던 이유는 사고 싶은 디비디, 음반, 카메라 가격이 두 배로 올라버린 탓도 크다. 어떤 부분에서는 광우병보다 더 민감한 문제였다.”(김태진 고클래식 회원, 2009년 6월 30일 위클리 경향)³⁾

이는 일상과 정치 영역 간의 경계가 매우 희미해진 단면을 보여준다. ‘일상 속의 정치’라는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현상이 디지털 컨버전스와 함께 강화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제기할 수 있는 의문점은 취미나 일상적인 관심사를 다루는 인터넷 공간상의 카페나 커뮤니티가 한 두 가지가 아닌데 왜 유독 특정 집단이 그 중심에 놓이게 되느냐 하는 것이다. 바라바시(2006: 97)는 “웹은 무작위 네트워크가 아님”이며 따라서 “웹에는 민주주의, 공정성, 평등성이 완벽하게 존재하지 않”으며 “널리 있는 수십억의 문서들을 모두 똑같이 볼 수만은 없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바라바시의 이런 관점을 토대로 조희정·강장묵(2008: 322-3)은 ‘커넥터’의 역할을 강조했다. “여러 허브 또는 의미 있는 콘텐츠가 공존하여 각각의 연결을 증대(weak tie) 하다가 일정 시점에서 발생하는 커넥터에 의해 각 허브의 연결이 긴밀해지고(strong

3) <http://newsmaker.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138&pt=nv>(검색일 2009. 9. 24).

tie) 조직화 된다. 커넥터의 출현은 네트워크 구조의 경로, 구조 확산이 변화하는 시점을 의미하며, 이 때 발생하는 의미 있는 콘텐츠는 전문가 콘텐츠보다 더 큰 신뢰와 영향력을 받는 집단지성이 발현될 수 있는 배경 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터넷 공간 내에 유독 특정한 카페, 블로그 미니홈피가 균등한 노드와 네트워크 작용을 가지는 무수한 카페, 블로그, 미니홈피를 제치고 허브가 되는 것은 “네트워크의 힘에 대한 평가가 단순히 연결의 수가 많다는 정량적 평가에 치중한 것이라면 커넥터의 출현은 정량적인 연결의 수가 일정한 환경에서는 정성적 변화를 초래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 구조에서 경로를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써 허브로 등장하게 되거나 네트워크의 트래픽을 급속히 증가시킬 수 있는 파급력 있는 콘텐츠의 진원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윤성이 · 조희정 · 류석진, 2008: 25).

전체적으로 볼 때 정치권이 디지털 컨버전스와 함께 그 역할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이러한 커넥터의 역할을 제대로 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향후에도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떠오르게 되면 인터넷 공간 내의 특정 카페나 커뮤니티, 블로그가 새로운 허브로 등장하게 될 가능성은 커 보인다. 향후에도 중요한 정치적 이슈의 중심적 공간은 기존의 대의제 정치권이 아니라 개인이 주도하는 인터넷 공간이 될 것이다. 디지털 컨버전스라는 환경의 변화는 개인의 정치적 정보 역량을 크게 강화시키고 있는 만큼 훨씬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일상적이고 사소해 보이는’ 일상적 이슈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 동원과 결집을 강화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심각하고 무거운 이슈에 의존해 온 중앙집중형 정당 조직이 이런 변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대의제 민주주의의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

제4 절 공적 공간과 사적 이슈 간의 충돌과 대의제

정보화의 진전으로 인한 시민 개인의 정치적 역량의 강화는 사회적인 의제 설정, 정치적 의견의 결집, 정치적 동원 등 정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외부의 도

움' 없이 스스로 주도해 갈 수 있게 만들었다. 특히 “정보기술은 지식의 생산과 소비 과정인 문화와 정체성, 이념의 형성에 관여하여, 물리적인 수단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지식과 문화를 통해 원하는 것을 얻어내도록 상대방을 설득하는 권력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된 것이다(조화순, 2008: 144). 이런 추세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은 국가의 정보 독점의 완화에 대한 것이다. 정보화는 “과거에 국가가 독점해 오던 정보 가운데 많은 부분이 국민에게 공개될 것이며, 그 결과 국가의 정보독점권이 상당 부분 약화될 것”이며 “시민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권 확대는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비판 기능을 강화시키고 정부 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기초해 있다. 즉 “정보 접근의 확대, 정치인과 시민 간의 접촉 확대, 시민사회의 활성화 등을 촉진시키며, 이는 다시 정부의 투명성, 책임성, 반응성을 제고시키고 일반 국민의 정치 참여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 온다”는 것이다(김용철·윤성이, 2005: 34). 개인의 정보 역량 강화는 곧 국가의 정보 통제권이나 독점을 약화시켜 투명성이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고 있다.

그러한 또 한편으로 이러한 개인의 정보 역량의 강화는 우리 사회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문제점도 낳고 있다. 정보화로 인한 개인 정보 역량의 강화는 사회 문제에 대한 개인 수준의 의견제시나 논의가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때때로 그 사안이 공론화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자신의 홈페이지나 블로그 혹은 친목을 위한 카페에 올려놓은 ‘대단히 사적인 글’이 인터넷상의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생겨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사적 이슈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공적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 것이다. 예컨대, 최근에 발생한 인기 가요 그룹 2PM의 ‘재범’ 군 사건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재범 군이 친구들과의 사적 소통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페이스북’(Facebook)에 올린 지극히 개인적인 심경의 피력이 여러 해가 지난 뒤 공개되면서 사회적인 논란거리가 되었고, 그로 인해 결국 한국을 떠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지극히 개인적인 의사소통이었지만 이것이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인터넷

공간을 통해 전파되면서 사회성을 지니게 된 것이다. 즉 매우 사적인 영역에 놓여 있는 이슈가 인터넷으로 연결된 네트워크를 통해 전파, 확산되면서 공공의 의미, 사회성을 획득하는 일이 매우 용이한 사회가 된 것이다. 물론, 앞에서 지적한 대로, 이런 현상은 정치과정에서 개별 시민, 집합적으로 시민사회의 영향력의 증대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지만, 사적인 영역에서의 활동이 그 의도와 무관하게 공적인 논의 과정에 연계되면서 두 영역 간에 충돌이 생겨날 수 있다. 개인 입장에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논의가 사회적 의미를 지니는데 대한 부담과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을 수 있는 반면, 사회적으로는 그러한 사적인 의견제시가 공적인 영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책임성과 관련된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문제점은 이와 같은 사적 이슈와 공적 영역 간의 괴리가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개인의 의사개진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이슈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 의견표명의 사적 의미를 강조할 것이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그로 인한 사회적 결과에 보다 의미를 부여하고자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국가가 지극히 사적인 논의의 영역까지 개입하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적 공간에서의 논의 과정이 기존의 제도권을 벗어난 독자적인 ‘권위’까지 만들어내게 되는 경우에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갈등은 더욱 고조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인터넷 공간 내의 자율적 활동의 증가가 기존의 사회 권위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한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충돌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개인의 정보 역량 강화는 공적 영역과 사적 이슈, 사적 행위 간의 갈등을 본질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사건이다. 이 사건은 평범한 한 개인이 인터넷 공간 내에 올린 글이 국가 기구에 대한 신뢰와 권위에 맞설 수 있는 정도의 ‘영향력’을 갖게 되면서 국가가 이를 제재하기 위해 개입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허위 사실 유포’라는 미네르바에게 부여된 ‘범죄’는 사실 그의 의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그의 주장이 인터넷 상의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되고 널리 수용되면서 사회성을 갖게 된 것이기 때문이

다. 이와 같이 정보화의 진전, 나아가 디지털 컨버전스의 추세 속에 강화되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네트워크 속의 개인의 정보 역량은 국가와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그만큼 더 높이고 있다.

사실 이러한 갈등은 정보화뿐만 아니라 민주화의 진전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강력한 개발 국가의 특성을 갖지 못한 한국 사회가 국가의 사회에 대한 상대적 자율성이 점차 약화되면서 국민들의 민감한 문제로 인해 촛불시위가 같은 대중시위나 시민운동이 과거보다 훨씬 더 큰 모멘텀을 갖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허태희·장우영, 2008: 145). 즉 권위주의 시대에 최정점에 달했던 국가 권력이,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시민사회와 시민 개인의 자율성과 활동 역량이 강화되면서 ‘충돌’을 빚는 경우가 빈번하게 생겨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정보화 및 민주화의 진전으로 국가와 개인 간의 갈등의 촉발 그리고 나아가 ‘권위’를 둘러싼 국가와 개인의 충돌은 결국 인터넷 공간 내의 개인 활동과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의 개입 및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의 정치사회적 영향력이 큰 만큼 국가로부터의 규제 역시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활동에 대한 국가 규제에 대한 평가는 다음의 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부정적이다.

“첫째, 정부 영역의 법률적 개입이 과도하다. 기존 매스 미디어와 달리 사회적 정보의 제작/생산, 유통/배포 기능이 선택적이고 이용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은 경직성이 높은 법률 중심의 정책과는 현실적 격차가 클 수밖에 없다. 국내의 경우 언론중재법, 저작권법, 정보통신망법 등의 법률을 중심으로 인터넷 규제 체계가 이뤄지고 있는 이는 기술과 제도의 시간적 격차가 항상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서비스 자체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규제 정책의 집행에서 행정 기구 중심의 규제 편의주의적 성격이 강하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뤄지는 인터넷 콘텐츠 규제는 이용자 편익과 권익 보호보다는 인터넷의 미디어적 기능에 지나치게 초점을 두으로써 정치적 해석과 판단이 우선하는 경향을 낳고 있다... 인터넷상의 개인 웹 미디어에서 이루어지는 게시물 간의 갈등과 대립은 명백하게 불법성을 드러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론장적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논리를 앞세워 규제하는 것은 규제편의주의적인 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이규정 외, 2009: 31).

인터넷 공간 내에서 이뤄지는 활동에 대한 국가의 규제와 함께 개인의 정보 역량 강화로 인한 또 다른 문제는 인터넷이 역으로 시민 활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감시의 장치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네트워크는 특성상 가치 중립적인 도구에 불과하지만 이용에 따라서는 오히려 시민을 통제하는 장치로도 활용될 수 있다. 바로 ‘유리 온실의 이중성’에 간히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시민이 유리온실의 밖에 존재한다면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개선하고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지만 오히려 시민이 온실 안에 있을 경우에는 통제될 수도 있는 문제점도 있다. 그런 맥락에서 네트워크는 기존의 방식과 다른 운동의 진행으로 연계성과 파괴력 등의 잠재적인 이득을 제공하고 위협요인도 만들어 줄 것이다. 정보 네트워크를 장악한 국가가 오히려 국민을 통제하려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송경재, 2008: 163).

그런데 이러한 현상과 관련하여 생겨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직접적인 갈등과 충돌을 중재해 줄 매개체의 역할이 대단히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정당, 그리고 궁극적으로 의회는 정치 과정의 매개체로 국가와 시민사회를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해 왔다. 시민사회 내에서 제기된 의견과 이해관계는 정당을 통해 적극적으로 결집되고 대표되면서 의회라는 대의 공간에서 논의되고 최종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정보화의 진전으로 인한 개인의 정치적 정보 역량의 강화는 사적 이슈가 중간의 매개체 없이 곧 바로 사회성을 지닌 이슈로 전환되고 이에 대해 국가가 직접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양자가 직접 맞부딪히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 그로 인해 국가와 시민사회의 중간에 위치하며 중재의 역할을 해 온 정당 등 대의제 기구의 역할은 크게 축소되었다. 다시 말해서 국가와 시민 개인 간의 갈등과 충돌은 보다 빈번해질 수 있게 되었지만 그 과정에 정당이 개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정보화의 진전이 의사표현이나 의견 결집 등 정치 ‘과정’ 속에서 정당의 역할을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정치적, 사회적 결과’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도 대의제 기구의 기능과 역할을 또 다시 위축시키고 있는 것이다.

제 4 장 결 론

제 1 절 연구의 요약과 함의

정보화의 진전은 과거 정당, 국가, 거대 언론 등 일부 기구의 정보와 지식의 독점을 해체하고 정보 획득과 확산. 해석에 있어서 민주화, 탈매개화라는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이로 인해 동원의 대상으로 존재해 온 시민사회가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사회적인 의제를 설정하고 이해관계를 집약, 표출해 내는 적극적인 역할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다. 정보 통신 매체의 기능적 융합과 사회적 네트워킹의 강화라는 디지털 컨버전스의 추세는 이러한 시민사회의 적극적 역할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그런데 디지털 컨버전스는 인터넷의 등장과 같은 정치·사회 전반에 대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가져올 만한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정보화 사회 도래 이후 이어져 온 정치·사회적 변화의 흐름을 강화시켜 주는 기술적 진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디지털 거버넌스는 보다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형태로 시민 개인 간의 정보 소통을 강화시켜주고 있다. 그런 점에 볼 때 디지털 거버넌스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변화의 가능성과 의미는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사건의 관찰과 기록, 보도, 확산, 통신 등의 복합적인 기능이 이제 한 곳으로 모아지게 됨으로써 개별 시민이 행하게 되는 정보 역량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만큼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화 이후에 나타난 정치적 변화는 질적인 수준에서 더욱 그 기조가 강화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에서는 기존의 정치 과정에서 중요한 매개체의 역할을 해 온 정당이나 의회와 같은 기구들이 디지털 컨버전스라는 기술적 진화의 흐름 속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는 크게 네 가지 조직적인 변화에 대해 주목했는데, 첫째로 조직의 단위가 집단적 정체성이라는 집합적 단위로부터 개인 중심으로

개인화하는 경향을 지적했다. 두 번째로 조직의 특성이 위계적이고 중앙집중적 조직 형태로부터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네트워크적 조직으로의 변화에 주목했다. 세 번째로 조직이 대표하는 이해관계 혹은 이슈가 물질적 가치나 경성 이슈로부터 유연하고 ‘사소한’ 생활이슈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네 번째로 사적 이슈와 공적 영역 간의 구분이 불분명해지면서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직접적 갈등과 충돌이 잦아지게 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큰 흐름 속에서 볼 때 디지털 컨버전스는 민주주의의 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시민의 정치적 자원동원 능력을 증대시킴으로써 시민의 정치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단지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참여방식과 정치적 효과의 측면에서도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하던 과거의 참여 방식에 비해 질적으로도 크게 진전된 양상을 보일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해 정치사회의 반응성(responsiveness)과 책임성(accountability)이 중요해질 수 있다. 즉, 정당, 의회와 정부가 시민사회의 투입(input)에 더욱 기민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압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앞에서 살펴 본 이러한 네 가지 변화는 디지털 컨버전스가 진행될 수록 대응이 쉽지 않은 어려움을 정당과 의회라는 대의제 기구에 던져주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컨버전스라는 새로운 환경의 도래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대의제 민주주의의 주요 기구들의 대응은 충분하지 않다. 실제로 2008년 촛불집회 현장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기성 정당들이 모두 시민들로부터 배척을 받았고 지지율도 크게 하락했다. 촛불집회로 표출된 정치적 불만에 대해 정당은 신뢰할 만한 매개체로서 별다른 기능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 컨버전스라는 기술적 변화가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니라 선순환의 정치과정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디지털 컨버전스로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제도적 기구들이 기존에 독점해 온 정치적 정보의 생성과 유통, 확산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디지털 컨버전스로 인한 새로운 환경의 도래가 아무리 정치참여와 정치적 소통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낸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이 정당을 근본적으로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정당과 의회가 배제되고 있는 이러한 현상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점은 정치적 책임성(political accountability)에 대한 것이다.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공공 사안에 대해 내려진 결정은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제도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정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거나 정책 결정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들은 그 결정이 정치 공동체에 의도한 대로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내지 못하면 그 결과에 책임을 지게 된다. 여론의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고 언론에서 비판받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선거라고 하는 정치적 심판의 기회를 통해 공직을 박탈하게 된다. 이처럼 ‘면직’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그러한 정치적 책임 추궁의 기회가 반복되므로 주어진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정치 참여를 통해 집단적으로 중요한 결정이 내려질 때, 이성, 합리성을 전제로 하더라도, 내려진 정책 결정에 대한 예기치 않은 결과가 생겨나거나 실패로 돌아갈 때 그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묻기가 어렵다. 다수에게 책임이 분산되므로 정책 결과에 대한 ‘상과 벌’의 개념으로 작동하는 정치적 책임성을 강제하기 어렵다. 인터넷 정치 참여와 관련하여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즉 “주요 국가정책이 대의 기구를 우회하여 국민들의 직접적 참여에 의해 결정될 경우,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을 무력하게 할 뿐 아니라, 자칫 일시적 흥분과 감정적 분위기에 휩싸여 비이성적 정책을 산출하는 포퓰리즘(populism)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윤성이·장우영, 2007: 99)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정당 이외의 다른 사이버 공간 상의 정치공동체와 인디 미디어가 새로운 중개조직으로 등장했지만 이들이 장기적으로는 ‘공허한 목소리’의 만연으로 이어짐으로써 오히려 참여의 효능감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이런 문제점을 지적한 것(윤성이·조희정·류석진, 2008: 85-6)이다. 또한 대표성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대표의 역할보다는 참여의 가치를 중시하는 수요자 중심 온라인 정치참여 모델의 경우 효율성의 저하와 함께 시민참여의 대표성 문제도 지적된다. 현실적으로 볼 때 시민들에게 정책결정 과정이 개방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비율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이 경우 참여자들이 전체 공동체의 이익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대표성의 문제가 제기되며, 결과적으로 정책의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윤성이·장우영, 2007: 99).

이러한 변화의 흐름의 특성을 감지하고 변화를 이해하며 주도하고자 하는 정치적 매개자로서의 정당과 의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현대 정치의 중요 행위자로서 정부, 정당, 시민사회를 상정한다면 디지털 컨버전스로 인한 정치적 정보 유통의 변화를 정확히 인지하고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 변화를 이끄는 정보사회의 정치적 매개자로 거듭나야 할 시급한 목표를 갖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제 우리 사회의 이해관계가 다양해졌고 특정 이슈에 대한 반응도 매우 상이하게 나타난다. 무엇보다 과거라면 ‘개인적 문제’나 ‘소수의 관심사’에 머물렀을 의제가 사회적 중요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오늘날의 대의 정치가 산업화 시대의 대중정당처럼 강한 정치적 일체감으로 대중을 위계적인 조직 속에 묶어내는 일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걸맞는 조직적 대응이 불가피한 시대가 되었다. 정보사회 네트워크의 핵심 요소가 노드(node), 커넥터(connector), 허브(hub)라면, 특히 커넥터로서 시민과 국가를 매개하는 정당과 의회의 의지와 능력이 더욱 중요해진 것이다. 지역적으로 수직적인 조직화가 과거 대중정당 형태의 특성이었다면, 이제는 기능적인 면에서 수평적인 조직화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시대가 되었다. 특정 집단과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이들의 이해관계를 배타적으로 대표하기보다는, 사회 내 존재하는 여러 우호적인 세력과 장기적인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사안별로 유연하게 사회 각 집단의 참여와 이끌어 내도록 하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조직적 특성은 정보화, 분권화, 거버넌스라고 하는 새로운 사회적 흐름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강원택, 2007b: 76).

디지털 컨버전스로 요약할 수 있는 최근의 정보화의 질적 심화는 인터넷 등장 이후 취약해지고 있는 정당과 의회 등 전통적인 대의제 기구에 더욱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다. 개인의 정치적 정보 역량이 증대되는 만큼 기존 대의제 기구를 우회하거나(혹은 의도적으로 무시하면서) 스스로의 자율적 활동의 범위를 확대시켜 나가고 있

다. 그러나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거리의 정치’가 정부의 일방적 통치에 저항하는 시민참여의 역동성은 보여주었으나 현실적 대안을 만드는 데는 분명한 한계를 보였다. 따라서 정보사회에서의 민주주의는 정당체제를 비롯한 대의민주주의 제도와 시민참여의 운동 정치 사이의 소통과 연계가 강화될 때 비로소 발전하는 것”이며 따라서 “문제는 대의제의 부정과 전복이 아니라 그것에 적절한 긴장을 가하여 정치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정치 모형들을 촉진하는 것으로서 즉 정치시장에서 대의제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와 담론들을 풍부”하게 만들어 민주주의를 질적으로 도약시켜야 하는 과제(윤성이·조희정·류석진, 2008: 85)를 갖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 정보의 소통에서 이제 비제도화된 영역을 포함한 복수(複數)의 채널이 사실상 공존, 경쟁하게 된 상황에서 정당이나 의회의 기능이 위축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당과 의회의 보다 유연하면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새로운 정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영향력을 갖는 주요 행위자들이 정당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이들을 충원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충원 구조가 대단히 개방적이고 투명해야 하지만, 동시에 정당의 집단적 정체성도 상당히 유연해져야만 한다. 쉽지 않은 과제인 셈이다. 그러나 이런 시도는 두 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 정당 지지의 폭을 구조화된 지지자, 예컨대 지역이나 이념과 같은 집단적 정체성에 의존하는 지지자들을 넘어서, 개인화되고 분절화된 새로운 형태의 유권자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즉 인터넷과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에 활동하는 ‘네트워크화된 개인들’의 일부를 정당이라는 제도적 기구 속으로 끌어 올 수 있다. 둘째,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조직에 의한 동원이 과거 정당 활동의 중요한 부분이었다면, 이런 방식은 이해관계나 관심에 따른 다수의 ‘연합’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즉 새로이 등장한 인터넷 공간상의 각종 집단 및 개인들과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디지털 컨버전스로 인한 정치적 정보 역량의 강화를 당내 혹은 의회 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또 다른 대응의 방식이 될 수 있다. 제도

권 정치 외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을 수용하여 정당 내부, 나아가 의회 내부의 조직적 특성이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에 부합하도록 변화시키자는 것이다. 정당 조직 내부에서 이런 변화를 수용한다면 과거와 같이 경직되고 중앙집권적이고 위계적인 조직의 특성은 크게 변화할 수밖에 없으며, 당내 민주주의 강화, 당내 의사소통의 강화가 이뤄질 것이다.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도래에 따른 외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도록 정당, 의회 정치 역시 조직이나 행태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야 할 것이다.

요컨대, 디지털 컨버전스의 시대에도 정당, 의회 등 대의제 민주주의의 핵심적 기제들은 여전히 그 기능적 건강함을 유지해야만 한다. 그런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급속히 변화하는 정보 환경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정치권의 의식의 변화와 노력이 무엇보다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제2절 정책 제언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 시민사회의 역동성에 대한 이해와 수용: 쌍방향 소통과 정책적 신뢰 획득의 중요성

디지털 컨버전스의 추세는 시민 개인의 정치적 정보 역량을 크게 강화시켰다. 과거처럼 국가, 정당, 언론 등에서 제공한 정보를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시민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확산하며, 그것을 토대로 정치적 영향력을 만들어 가는 적극적인 주체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추세가 되고 있으며 방통 융합과 같은 기술적 진보는 보다 효율적으로 시민 개인이 정치적 정보 생산과 유통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시민사회를 설득하려고 하거나 일방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시대는 아닌 것이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솔직한 정보 제공을 통한 논의의 활성화와 그것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다 정보 제공과 함께 쌍방향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정책 추진에 대한 대중의 신뢰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되었다.

▶ 정당, 의회 등 대의제 기구의 대응이 시급: 정치적 책임성과 제도적 안정성의 확보의 중요성

디지털 컨버전스로 인한 시민 개인의 정치적 정보 역량의 강화는 전통적인 대의제 기구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제 설정, 정치적 동원, 의사결정과 확산 등 정치과정의 중요한 기능이 대의제 기구와 무관하게 인터넷 공간 내에서 모두 이뤄질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시민사회의 자율성 제고와 민주주의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정치적 책임성과 제도적 안정성이라는 차원에서는 적지 않은 문제점도 낳고 있다. 포퓰리즘의 위협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과거 산업시대에 기반한 정당 조직이나 의회 운영의 형태로는 정보화의 진전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수평적이고 유연한 새로운 조직적 대응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거리의 정치’가 ‘제도의 정치’를 대신할 수는 없다.

▶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갈등, 마찰의 가능성 증대: 규제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야

디지털 컨버전스 등 정보화의 진전으로 인한 개인의 정치적 정보 역량의 강화는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갈등과 마찰을 증대시킬 수 있다. 특히 인터넷 공간 내에서 스스로 형성되는 ‘권위’는 국가나 전통적인 사회의 권위체제와 충돌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대해 규제 일변도로 이를 억압하려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 아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국가와 구분되는 인터넷을 통한 자율과 독립의 공간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명명백백한 범죄 행위가 아니라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터넷 공간 내의 자율적 정화 기능과 선별 기능을 최대한 인정하고 수용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규제를 통해 인터넷 공간 내의 활동을 제어하거나 통제하려

고 한다면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마찰만 잦아질 것이며, 오히려 국가 권위를 훼손하는 역효과를 낳게 될 것이다.

▶ **일상과 문화, 정치의 결합: 새로운 정치참여 유형에 대한 이해의 필요**

정보화 진전과 함께 나타나고 있는 흥미로운 특성 가운데 하나는 정치참여의 형태가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엄숙하고 무거운 이슈를 다루고 나의 일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간주되던 정치가 이제는 인터넷과 함께 가볍고 일상적인 것으로 변화되었다. 또 정치를 문화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방송, 통신이 융합되는 디지털 컨버전스의 시대에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그러나 법적, 제도적 규정은 여전히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 공간 내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변화가 제도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제도적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의회, 정당 등 대의제 기구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디지털 컨버전스와 그로 인한 개인의 정보 역량 강화는 대의제 기구의 전통적 역할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수동적으로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개방적인 층위, 정당 정체성의 상대적 유연화, 수평적 네트워크의 구축, 당내 민주주의 강화, 당내 의사소통의 강화 등은 정당, 의회 등의 대의제 기구가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는 중요한 방안이 된다.

참 고 문 헌

- 강원택(2008), 『웹 2.0 시대의 한국정치』, 책세상.
- _____ (2007a), 『인터넷과 한국 정치: 정당 정치에 대한 도전과 변화』, 집문당.
- _____ (2007b), “민주화 20년의 정당정치: 평가와 과제”, 『경제와 사회』, 74호, pp.66~83.
- 김용철(2008), “촛불시위의 동학: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만남”, 『정보화정책』 15권 4호, pp.120~139.
- 김용철·윤성이(2005), 『전자민주주의: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의 모색』, 오름.
- _____ (2000), “인터넷의 정치적 활용과 16대 총선”, 『한국정치학회보』 34집 3호, pp.129~147.
- 김용호(2004), “네티즌 포폴리즘이나, 새로운 형태의 정치참여인가? 노사모 사례연구”, 『2004 IT 정책연구 자료집: 정보 기술과 정치, 사회의 변화』, 정보화 정책자료 2004-3, pp.74~91.
- 류석진(2008), 「네트워크 사회로의 변화와 정당의 과제」, 미발표 논문.
- 류석진·이현우·이원태(2005), “인터넷의 정치적 이용과 정치참여: 제17대 총선에서 대학생 집단의 매체 이용과 투표 참여를 중심으로”, 『국가전략』 11권 3호, pp.141~169.
- 바라바시, A. L, 2006, 『링크: 21세기를 지배하는 네트워크 과학(Linked: The New Science of Networks)』, 강병남·김기훈 (역), 동아시아.
- 배 영(2002), 『사이버공간의 사회자본: I사 포럼 분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 송경재(2008), “2008년 촛불과 네트워크형 시민운동의 전망”, 『시민과 세계』 14호, pp.156~164.
- _____ (2005), “사이버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과 네트워크 정치참여”, 『한국정치학회보』 39집 2호, pp.423~442.

- 송경재(2004), 『한국의 사이버공동체와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정치의교학과 박사학위 논문.
- 윤성이(2008), “온라인 정치참여 연구의 동향과 쟁점: 인터넷 선거 연구를 중심으로”, 『정보화정책』 15권 3호, pp.3~20.
- 윤성이·이원태(2009), “디지털 시대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2권 1호, pp.59~84.
- 윤성이·류석진·조희정(2008), 「인터넷 정치참여와 대의민주주의: 2008년 촛불집회를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 윤성이·장우영(2007), “한국의 온라인 정치참여 특성: 수요자 중심 모델을 중심으로”, 『정보화정책』 제14권 제4호, pp.82~101.
- 이규정·황용석·이동훈·김세환·주윤경(2009), 「개인 웹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 연구」, 한국정보화진흥원(2009. 6).
- 이동후(2004), “IT와 ‘신세대’문화의 형성, 확산과정”, 「IT의 사회문화적 영향 연구: 21세기 한국 메가트렌드 시리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이원태(2004), 인터넷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 “2004년 한국의 제17대 총선 정국을 중심으로”,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 논문.
- 이재열·송호근(2007), “네트워크 사회의 가능성과 도전”, 『네트워크 사회의 구조와 쟁점』,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현우(2008), “정치 참여 유형으로서의 촛불집회: 대표성과 변화”, 한국국제정치학회 건국 60주년 기념 공동학술회의 발표 논문, 한국정치학회.
- 임병규(1999), “정보사회와 한국 전자민주주의”, 『의정연구』 5권 21호, pp.111~137.
- 임혁백(2009), 『신유목적 민주주의: 세계화, IT 혁명 시대의 세계와 한국』, 나남.
- _____(2001), “정보화 사회와 민주주의: 한국 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정치학회 편, 『정보사회와 정치: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의 모색』, 오름, pp.15~46.
- 서키, 클레이(Clay Shirky), 2008, 『끌리고 쏠리고 들끓다, Here Comes Everybody』, 송연석 (역), 갈리온.
- 송경재(2005), “네트워크 시대의 정치참여: 탄핵정국 디시인사이드 정치토론 게시판

- 을 중심으로”, 『담론 201』, 8권 3호, pp.123~160.
- 송경재(2004), 『한국의 사이버 공동체와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우영(2007), “ICTs와 정당의 ‘적응’: 정치인 팬클럽의 역할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7집 1호, pp.95~118.
- 장우영·송경재(2007), “정보화 시대의 선거와 유권자”,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2호, pp.237~261.
- 정병기(2003), “독일 정당의 온라인 활동과 인터넷 선거운동”, 『한국정치연구』 12집 2호, pp.193~211.
- 조기숙·박혜윤(2008), “광장의 정치와 문화적 충돌: 2008 촛불집회에 대한 경험적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42집 4호, pp.243~268.
- 조성대·정연정(2006), “사이버커뮤니티와 정보접근, 그리고 정치참여: 17대 총선과정에서 나타난 인터넷의 정치적 효과”, 『한국과 국제정치』 22권 2호, pp.29~62.
- 조화순(2008), “디지털 시대의 정치학: 정보정치학의 연구내용과 과제”, 『정보화정책』 15권 4호, pp.140~154.
- 조희정(2009), “네트워크 사회의 선거운동 전략에 관한 연구: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국가전략』 15권 2호, pp.89~121.
- 조희정·강장묵(2008), “네트워크 정치와 온라인 사회운동: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2집 3호, pp.311~332.
- 카스텔 마누엘(Manuel Castells)(2004), 『인터넷 갤럭시』, 박행웅 (역), 한울아카데미.
- 허태희·장우영(2008), “촛불시위와 한국정치: 그 의미와 과제”, 한국국제정치학회 건국 60주년 기념 공동학술회의 발표 논문, 한국정치학회.
- Arterton, Christopher.(1987). *Teledemocracy: Technology Protect Democracy?* Sage.
- Barber, Benjamin.(1984). *Strong Democracy: Participatory Politics for a New Ag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Benjamin, Gerald.(1982). “Innovation in Telecommunications and Politics.” in Benjamin ed. *The Communications Revolution in Politics.* Academy of Political Science.

- Bentley, Arthur.(1908). *The Process of Government*.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imber, Bruce.(1998). “The Internet and Political Transformation: Populism, Community and Accelerated Pluralism.” *Polity* 31: 1.
- Cairncross, Frances.(1999). *The Death of Distance: How the Communications Revolution Will Change Our Lives*. 홍석기(역), 『거리의 소멸@디지털 혁명』, 세종서적.
- Chadwick, Andrew.(2006). *Internet Politics: States, Citizens, and New Communication Technologies*. Oxford University Press.
- Dahlberg, L.(2001). “The Internet and Democratic Discourse: Exploring the Prospects of Online Deliberative Forums Extending the Public Sphere”.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Society* vol. 4, no.1, pp.615 ~ 33.
- Dalton, Russel and Martin Wattenberg(eds). 2000. *Parties without Partisans: Political Change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Oxford University Press.
- Davis, Richard.(2000). “The Political Impact of the Internet: The American Experience”, in Gibson and Ward (eds.). *Reinvigorating Democracy*, pp.189 ~ 203.
- _____ (1999). *The Web of Politics: The Internet's Impact on the American Political System*. Oxford University Press.
- Davis, Richard and Diane Owen.(1998). *New Media and American Politics*. Oxford University Press.
- Epstein, Leon.(1967). *Political Parties in Western Democracies*. Frederick Praeger.
- Gibson, Rachel and Stephen Ward.(2000). *Reinvigorating Democracy? British Politics and the Internet*. Ashgate.
- _____ (1998). “UK Political Parties and the Internet: Politics as Usual in the New Media”. *Harvard International Journal of Press/Politics*. vol.3, no. 3, pp.14 ~ 38.
- Gunther, Richard and Larry Diamond.(2001). “Types and Functions of Parties”, in Gunther and Diamond(eds.). *Political Parties and Democracy*.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pp.3 ~ 39.

- Kahn, Richard and Douglas Kellner.(2004). "New media and Internet Activism: from the 'Battles of Scattle' to Blogging". *New Media & Society* 24(1).
- Katz, Richard and Peter Mair.(1995). "Changing Models of Party Organisation and Party Democracy". *Party Politics* vol. 1, no. 1, pp.5 ~ 28.
- Katz, Richard and Robin Kolodny.(1994). "Party Organization as a Empty Vessel: Parties in American Politics", in Katz and Mair(eds.). *How Parties Organize: Change and Adaptation in Party Organizations in western Democracies*. Sage, pp.23 ~ 50.
- Lazarsfeld, P., B. Berelson and H. Gaudet.(1944). *The People's Choice*. Columbia University Press.
- Margolis, M, D. Resnick and J, Wolfe.(1999). "Party Competition on the Internet: Minor versus Major Parties in the UK and USA". *Harvard International Journal of Press/Politics*. vol.4, no. 4, pp.24 ~ 47.
- McCaughey, Martha and Michael Ayers(eds).(2003). *Cyberactivism: Online Activism in Theory and Practice*. Routledge.
- Mossberger, K., C. Tolbert, and M. Stansbury.(2003). *Virtual Inequality: Beyond the Digital Divide*. Georgetown University Press.
- _____ (2003). *Virtual Inequality: Beyond the Digital Divide*. Georgetown University Press.
- Naisbitt, John.(1986). *Megatrends: Ten New Directions Transforming Our Lives*. Warner Books.
- Norris, Pippa.(2003). "Preaching to the Converted? Pluralism, Participation and Party Websites." *Party Politics* vol.9, no.1, pp.21 ~ 45.
- _____ (2001). *Digital Divide: Civic Engagement, Information Poverty and the Internet Worldwid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2000). *A Virtuous Circle: Political Communication in Postindustrial Societ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lson, Mancur.(1965).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Public Goods and the Theory of*

- Groups*. Harvard University Press.
- Panbianco, Angelo.(1988). *Political Parties: Organization and Pow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esnick, D.(1999). “The Normalisation of Cyberspace”, in Toulouse and Luke (eds.). *The Politics of Cyberspace*. Routledge. pp.48 ~ 68.
- Rosenstone, Steven and John Hansen.(1993). *Mobilization, Participation and Democracy in America*. Macmillan.
- Schattschneider, E. E.(1942). *Party Government*. Holt Rinehart & Winston.
- Schudson, Michael.(1998). *The Good Citizen: A History of American Civic Life*. Free Press.
- Schwartz, E.(1996). *Netactivism: How Citizens Use the internet*. Songline Studios: Sebastopol, CA.
- Seyd, P. and P. Whitely.(1992). *Labour’s Grassroots*. Clarendon Press.
- Smith, Colin.(1998). “Political Parties in the Information Age: From mass party to Leadership Organization?”, in Snellen and van de Donk (eds.). *Public Administration in an Information Age*. IOS Press.
- Sunstein, C.(2001). *Republic.com*. Princeton University Press.
- Tkach-Kawasaki, Leslie.(2003). “Politics@Japan: Party Competition on the Internet in Japan”. *Party Politics* vol. 9, no. 1, pp.105 ~ 123.
- Toffler, Alvin.(1981). *The Third Wave*. Bantam.
- Wellman, B, K. Hampton, I. de Diaz, and K. Miyata.(2003). “The social affordances of the Internet for networked individualism.” *Journal of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8(3).

디지털 컨버전스 기반 미래연구(I) 시리즈 안내

- 09-01 디지털 컨버전스 기반 미래연구(I) 총괄보고서(황주성, KISDI)
- 09-02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의식과 행동(이종관, 성균관대)
- 09-03 영상콘텐츠의 일상화에 따른 인지방식의 변화(김성도, 고려대)
- 09-04 욕망과 매체변화의 상관관계와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욕망구조(김상호, 대구대)
- 09-05 디지털 콘텐츠 표현양식과 다중정체성의 양상: 사례분석과 미래문화의 전망 (김연순, 성균관대)
- 09-06 디지털 컨버전스와 공간인식의 변화(황주성, KISDI)
- 09-07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에서의 정치제도와 시민사회 변화 연구(류석진, 서강대)
- 09-08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에서의 대의제 변화와 정당의 역할(강원택, 숭실대)
- 09-09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에서 정치 거버넌스의 변화(윤성이, 경희대)
- 09-10 디지털 융합시대 온라인 사회운동 양식의 변화와 의미(장우영, 대구가톨릭대)
- 09-11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에서 글로벌 정치질서의 변화: 네트워크 사회에서의 국내정치와 국제관계(홍원표, 한국외대)
- 09-12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 미디어 플랫폼의 진화와 정치참여 연구(이원태, KISDI)
- 09-13 컨버전스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 연구(조남재, 한양대)
- 09-14 미디어 플랫폼의 다양화가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정현수, 건국대)
- 09-15 방송통신 융합환경에서 감성적 공감대 기반의 소비행동에 관한 연구(김연정, 호서대)
- 09-16 녹색성장 전략에서 차세대 통신망의 역할(홍성걸, 국민대)
- 09-17 디지털 융합과 콘텐츠 관련 산업의 공급사슬 변화 연구(한현수, 한양대)
- 09-18 디지털 컨버전스와 주요 멀티미디어 비즈니스 모델의 진화(손상영, KISDI)
- 09-19 융합사회의 소통양식 변화와 사회진화 방향 연구(김문조, 고려대)
- 09-20 미디어 융합의 전개과정과 사회문화적 파장(유승호, 강원대)

- 09-21 미디어 발전과 사회 갈등 구조의 변화(이명진, 고려대)
- 09-22 융합 사회의 인간, 인간관계: 온라인 자아 정체성과 사회화를 중심으로(민경배, 경희사이버대)
- 09-23 융합미디어를 활용한 공공-민간 상호작용 확대방안 연구(정국환, KISDI)
- 09-24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에서 미디어 문화 패러다임의 변화(이호규, 동국대)
- 09-25 가상성과 일상성의 컨버전스에 관한 연구(임종수, 세종대)
- 09-26 미디어 컨버전스와 감각의 확장: 감각확장 미디어의 사용성에 대한 연구(정동훈, 광운대)
- 09-27 컨버전스 시대와 매체로서의 개인(김관규, 동국대)
- 09-28 컨버전스 시대의 트랜스미디어 이용자 연구(이호영, KISDI)
- 09-29 미래예측방법론을 활용한 디지털 컨버전스의 미래 연구(최항섭, 국민대)

디지털 컨버전스 기반 미래연구(I) 시리즈 09-08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에서의 대의제 변화와 정당의 역할

2009년 9월 일 인쇄

2009년 9월 일 발행

발행인 방 석 호

발행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경기도 과천시 용머리2길 38(주암동 1-1)

TEL: 570-4114 FAX: 579-4695~6

인쇄인 성문화

ISBN 978-89-8242-633-9 94320

ISBN 978-89-8242-655-1 (세트)
